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1993. 10.

鄭永泰(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本 研究는 政權安保 중심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과거 북한 군사 정책의 展開樣相을 고찰하고 최근의 전략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북한 군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또는 극복을 위하여 북한이 그들의 군사적 정책 대안으로서 核政策을 어떻게 運用해나갈 것인가를 展望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第 II 章 北韓 安保의 基本 論理構造： 主體, 客體, 威脅

국가안보가 본질적으로 방위적인 것이라 한다면 국가안보의 이론적 구성은 3가지 측면 즉 安保行爲者(主體), 安保對象(客體), 威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안보 역시 세가지 국면 즉 安保의 主體, 客體 그리고 威脅 등의 기본 논리구조를 가진다.

북한 통치방식의 특징은 북한사회의 모든 면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노동당의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김일성 개인의 獨裁가 黨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안보

의 주체는 김일성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우선적으로 보전 및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 것은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김일성 정권이 분명한 바 북한안보의 객체는 자연히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自體가 될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을 지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행위 또는 세력이 바로 북한안보의 위협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安保에 대한 위협은 국내외의 군사·비군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부적 위협 뿐만 아니라 외부적 위협에도 직면해 왔다. 특히 북한은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외부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무력적화통일의 대상이자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그리고 미국을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경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적 간섭의 위협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상에서 북한 安保의 主體, 客體, 威脅 등 세가지 국면 모두가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安保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은 대남무력적화 목표 뿐만 아니라 대내적 위협요소 및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대외적 위협요소를 축으로 하는 안보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왔다. 안보정책의 한 수단인 군사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第Ⅲ章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

북한의 안보논리구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군사정책 역시 김일성 정권의 독점적 이익을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과도하리 만큼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면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해온 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보존 및 확대라는 정권안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 政權安保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 화통일의 궁극적 달성을 통한 김일성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고, ② 대내적으로 군비증강 및 전사회의 병영화 등과 같은 군사적 제조치를 통하여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③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 제국주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정책을 수행해왔다.

김일성정권은 일단 남한을 무력적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궁극적인 지배기회를 최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軍需産業

을 과도하리 만큼 확충·발전시키면서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또한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군사력 강화정책은 전사회의 병영화로 북한사회를 용이하게 통제하고 “전군, 전민, 전국이 무장한” 강대한 주체나라임에 대한 대내외적 과시를 통한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가능케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兩強大國으로부터 심리적·정신적 개입의 간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물리적 개입의 위협을 일찍부터 인식해왔기 때문에 對중·소 자주노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국방자위를 위한 군사력 강화정책을 필요로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판문점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도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으며 미·일 안전보장체계와 한·미 상호안보체계간의 관계성 속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도 직면해 있는 것으로 인식해온 것 같다. 북한은 미·일의 직·간접적 위협을 유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對美·日 關係를 개선하려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으로는 군사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체계를 발전시켜왔던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김일성 정권안보 측면에서 대남적화통일 및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나 남한을 비롯한 그들의 대내외적 위협인식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정책은 김일성 정권안보 차원에서의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전략을 위해서나,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는 최선책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점

차적으로 약화되어온 경제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으로 하여금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第Ⅳ章 北韓 安保環境의 構造的 變化

지난 몇년 사이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환경은 크게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美國과 舊蘇聯을 주축으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였던 冷戰體制는 구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새롭게 재편되었다. 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는 정부수립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구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북한은 냉전체제에서 누려오던 각종 利點들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국제적 정치지위 제고를 위해 크게 기여해왔던 非同盟勢力 또한 약화됨으로써 한층 더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소련이 남긴 공백을 주변의 유일한 親北韓 사회주의 강국인 中國이 메꾸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구소련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국인 중국과도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기존의 적대국으로 인식해왔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매우 전향적인 활동

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전방위 외교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도 한국이 1980년대말 이후 거의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잇달아 국교를 수립하고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원세력 국가인 구소련 및 중국과 차례로 국교를 정상화 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역량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남한의 괄목할 만한 경제력 성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기반으로 1976년부터 단년도 군사비 총액에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1.4배, 그리고 1990년~1991년에 가서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남북한 국방비의 단년도 격차는 향후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권력승계체제의 마무리 단계에 처한 북한은 그 어느때 보다도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많은 限界性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 경제는 1990년 이후 연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정책적 선택의 관건은 대외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내부체제의 공고화 목적을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투자를 일단 어느 정도까지 증강시킬 것이며 동시에 경제성장 노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분배해야 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이나 경제성장 노력은 모두 政權安保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 바, 북한은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서도 북한 경제성장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은 현재보다 경제적이면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軍事政策 代案으로서 核武器와 같은 大量殺傷武器 開發을 한층 심화시켜 그 타개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第 V 章 北韓의 軍事政策 代案으로서의 核政策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정권안보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구해오던 군사력 증강정책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는 북한경제는 이를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총체적인 군사적 억제 기능 측면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개발비용 측면에 있어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대안적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지나친 군사적 의존성을 탈피하고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입지 구축을 위해서나 남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오래전 부터 핵무기 개발을 서둘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북한은 국제적 위신 증대를 통한 김일성 자신의 정통성을 고양시키며 실질적인 권력승계자인 김정일 지도권하의 政權生存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핵개발을 일찍 부터 필요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의 원자력 산업은 전형적인 핵무기 개발지향사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북한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핵개발의 1 단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폭장치 및 특수폭약 개발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 고품실험(핵개발의 2단계)을 1983년부터 현재 까지 약 70~80회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장의 최종단계인 운반수단 확보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핵무장해제 요구 및 핵무기 불취득 약속을 기초로한 「핵평화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자체의 핵개발 사실을 은폐하여 그들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잠정적으로 회피 또는 감소시켜 왔다. 1992년 1월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에 의거 핵사찰 수용후 북한의 핵시설이 핵무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감지되어 북한은 국제적 압력 특히 미국의 制裁威脅에 직면하여서도 그들의 핵무장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오히려 평화적 核利用만을 강조하여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핵개발에 대하여 철저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오히려 실리

를 챙기기 위한 핵모호성 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의 핵의혹을 더하면서 핵모호성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켜준 것은 영변 부근에 급조된 듯한 2개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직면하여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사실이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으로 재처리 능력, 플루토늄 保有有無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사실상의 핵무장 옵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옵션을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공개하는 이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NPT 탈퇴라는 強攻手段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친 美·北韓 고위급회담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단계 4차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몇몇 중요한 요구들을 관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쌍방간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모호성 정책의 효율성은 對美關係에 있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남관계 및 대내적 측면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북한은 핵모호성 정책을 통해 미·북한 협상 테이블에서 거의 강대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미국·한국·북한의 삼자관계에 있어서 향후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핵문제를 수단으로 적극적인 對美協商을 벌임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한의 안보 불안정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북한은 핵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상 당사자로 남한을 제외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남한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 차원에 있어서도 북한은 그들의 핵카드를 기민하게 구사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후 도래하게 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러한 업적을 김정일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가능성들은 단지 북한이 그들의 핵모호성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얻어졌거나 얻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그들의 핵무장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어진 위기상황을 핵모호성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인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옵션의 결정적인 포기없이 다양한 형태의 핵모호성 정책 수행을 통하여 金父子 世襲體制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第 VI 章 結 論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북한의 안보는 김일성 개인을 주체로 하며 노동당 일당지배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을 객체로,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 내지는 저지를 추

구하는 세력 또는 행위 등을 위협으로 하는 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논리구조하에서 북한의 군사정책 역시 김일성 정권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하여 대남군사적 적화통일 전략 및 대내 체제공고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정책 차원에서 수립·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 정권안보를 위하여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화통일을 궁극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김일성의 지배기회를 최대화 하며, 대내적으로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제국주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위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지속하여 왔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극도로 악화되어온 전략환경하에서도 이러한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완화 또는 수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김일성의 정권안보를 위하여 이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왔다. 문제는 북한이 침체되어 가는 경제여건상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실질적인 군사력우위에 입각한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金父子의 世襲政權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정권안보 측면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정책의 심화를 통한 정권유지를 꾀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정권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고, 군사적으로도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군사적 우위확보 중심의 군비증강 정책만은 고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경제 능력의 저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소모적인 재래식 무기 증강정책을 지양하면서 이

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에 개발해오던 핵개발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핵개발은 총체적인 軍事的 抑制 機能側面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開發費用 側面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北韓의 핵개발 정책은 경제력 저하로 난관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정권안보에 필요한 지속적인 군비증강정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정책 대안임에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北韓은 일종의 핵모호성 정책을 주도면밀하게 구사하여 국제적 제재를 피하면서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협력과 같은 관계개선책을 유인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의 핵카드의 당분간은 국제적 압력을 자초하게 되어 정권안보를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政權安保를 담보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北韓은 스스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지 상대에게 그 존재 가능성만을 인식시키고도 상당한 이익을 유인해낼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정권의 붕괴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일종의 보장책으로 작용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인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北韓은 붕괴의 위험성을 수반한 군사적 유희태도를 선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핵카드 게임과 같은 어렵고도 위험한 공세적 군

사정책을 견지함으로써 現狀維持(status quo) 즉 김일성 唯一支配政
權 維持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第 II 章 北韓 安保의 基本 論理構造: 主體, 客體, 威脅	7
1. 北韓 安保의 主體: 김일성 vs 國家	10
2. 北韓 安保의 客體: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vs 北韓 社會主義 體制	13
3. 北韓 安保에 대한 威脅	17
第 III 章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	21
1. 對南 武力赤化 統一戰略: 김일성 政權의 支配機會 最大化	21
2. 內部體制 鞏固化를 위한 強兵政策	23
3. 對中國·舊蘇聯 斷絕戰略과 國防自衛政策	25
4. 對美·日 防禦政策	32
5. 小結論: 軍事力 增強政策과 政權安保	37

第Ⅳ章 北韓 安保環境의 構造的 變化·····44

- 1. 對外的 環境·····44
 - 가.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中國·러시아의 對北韓 軍事支援 減少·····47
 - 나. 北·日, 北·美 關係改善의 不透明과 北韓의 核問題··54
- 2. 對南的 環境·····58
 - 가. 韓國의 北方外交와 國際的 位相 強化·····58
 - 나. 韓國의 經濟力 強化에 따른 軍事力 增強 趨勢·····61
- 3. 對內的 環境·····64
 - 가. 김정일 權力承繼上의 過度的 要求: 權力基盤 構築과 軍事力 增強·····64
 - 나. 國防優先政策과 經濟的 限界의 相衝性 深化·····69
- 4. 小結論: 김일성 政權의 不變과 軍備增強政策 意志 固守··72

第Ⅴ章 北韓의 軍事政策 代案으로서의 核政策·····78

- 1. 核擴散 理論과 北韓의 核開發 誘引要因·····78
 - 가. 核擴散 理論·····78
 - 나. 北韓의 核開發 誘引要因·····84
- 2. 北韓의 核開發 能力 評價·····89
 - 가. 核燃料 供給·····91
 - 나. 原子爐 施設·····92
 - 다. 再處理 施設·····96

라. 核武器 保有 展望과 威脅의 實體·····	101
3. 北韓 核政策의 特徵과 展望·····	103
가. 北韓 核政策의 特徵·····	103
나. 北韓 核政策의 展望·····	113
第 VI 章 結 論·····	125
參考文獻·····	131

第 I 章 序 論

북한 군사력의 總量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군사력의 실질적인 규모와 全社會의 ‘兵營化’가 국가의 力量과 國家安保에 대한 威脅要素의 客觀的 심각성에 비해 과도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의 군비증강이 국가능력에 비해 과도했음을 다음과 같이 솔직히 시인한 바 있다.

오늘에 와서는 튼튼한 자립적인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조국보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대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은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¹⁾

여기에서 북한의 이러한 비합리적 군비증강노력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그들의 軍事力量을 과도하게 강화해 오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구되고 있는 國家安保(national security)維持 목적에 더하여 비정상적인 군사적 부담을 요구하는 政權安保(regime security)維持 목적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더 나아가

1)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256~58.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구체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에서 ‘국방력 건설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는 ‘국방자위’는 과연 북한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國家防衛政策의 개념인가 아니면 ‘유일지배체제’, ‘김부자 세습체제’, ‘김일성 우상주의’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 북한의 특이한 정권의 안보에 근거한 것인가? 북한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간의 重複·相殺關係를 구축함으로써 全社會의 軍事化 및 군비증강의 악순환이라는 딜레마에 처해온 것이 아닌가?

이상의 諸疑問들은 과도한 군비증강과 공세적 군사태세 견지를 특징으로 한 북한의 군사정책이 국가안보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정권안보에 기초한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정통성 위기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정권안보간의 重複·相殺關係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²⁾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가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온 사례가 많다. 특히 정통성을 결핍한 정권의 위정자들은 정권에 대한 위협관리를 주된 정책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서 가상의 적과 외부의 위협을 창출 또는 과장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침략행위를 수행하기도 하며, 경직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운용을 통해 국민을 통제해 나간다. 또한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전국민과 시민사회를 통제·동원하여 정권위협의 확산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고자 한다.³⁾ 결국 이러한 국

2) 문정인, “탈냉전과 제3세계 국가안보의 재조명-‘소프트 웨어’를 중심으로 한 접근,” 「현대사회」 (1992 봄·여름), p. 98.

가들에 있어서는 정권안보를 위해서 국가안보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이상의 과도한 군사력과 공격적인 군사태도 견지를 필요로 한다.

북한과 같은 一人獨裁體制의 경우,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보다는 權力 擔當者(people in power) 즉 김일성 개인이익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온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군사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국가안보의 개념에 더하여 정권안보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북한은 김일성 唯一政權의 지배기회를 최대한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對南 武力赤化統一戰略을 위한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필요로 해왔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미제국주의'의 직접적 위협과 군사동맹관계를 맺어온 중국 및 구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압력 및 간섭 가능성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위협에 대한 防禦政策을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북한은 全社會의 兵營化를 통한 대내적 체제공고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군비강화정책을 필요로 해왔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를 위해서 '미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위협성과 對南武力赤化統一의 당위성을 인민들에게 과장·고취시켜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정권안보 구축을 위한 이러한 군사적 필요성은 자연히 공세적이면서 동시에 국가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군사적 안보관리능력의 강화를 동반하는 군사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의 군사정책과 관련한 본 연구는 이러한 政權安保 중심적 분석틀에 기초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존의 북한 군사정책 연구는 주로 북한의 對南武力赤化 革命戰略의 기본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반도의 공산화통일 달성을 북한 군사정책의 최대·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들 연구의 특징이다. 특히 한국의 「國防白書」는 “북한의 군사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를 적화통일에 두고 3대혁명역량강화와 4대군사노선을 골간으로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같은 분석은 첫째, 북한은 적화통일을 북한정권이 달성해야할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둘째, 북한의 주도하에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화가 요구되며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무력역량의 강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 셋째, 북한은 이같은 이유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군비증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⁵⁾ 이와같은 대남 중심적 분석틀은 북한이 대남무력적화전략을 약화 또는 포기하게 되면 공세적 태세와 과도한 군비증강을 특징으로 한 북한의 군사정책이 자연히 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외부적인 압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세적

4)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國防部, 1993), p. 43.

5) 서진영,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방비문제,” 이호재 편, 「韓半島 軍縮論」(서울: 法文社, 1989), p. 143.

태세를 견지하면서 실질적인 군축 또는 군비통제협상을 거부하고 오히려 핵무기개발을 포함한 군비증강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들의 군사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대남무력적화전략을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그들의 공세적 군사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남무력적화통일 의지 이외에도 이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김일성 唯一支配政權의 安保維持 차원에서 대내외적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권안보적 분석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적 차원의 對南 중심적 분석들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북한 군사정책의 이해를 提高할 수 있는 利點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권안보적 분석들에 기초하여 과거 북한 군사정책의 展開樣相을 고찰하고 최근의 전략환경의 변화가 기존의 북한 군사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또는 극복을 위하여 북한이 그들의 군사적 정책대안으로서 核政策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북한 안보의 基本體系, 북한의 군사정책 展開樣相, 북한 안보환경의 構造的 變化, 북한 核政策 方向 등 크게 4개 章으로 구분된다. 제2장에서 主體, 客體 및 威脅을 주내용으로 하는 북한 안보의 基本體系를, 제3장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정책의 전개양상을 설명할 것이며, 제4장에서는 북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대내외적 환경과 대남환경

6

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환기 북한의 군사정책 代案으로서의 核政策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第 II 章 北韓 安保의 基本 論理構造： 主體, 客體, 威脅

安保(security)는 원래 라틴어의 접두어 se(～이 없는)와 cura(불안, 공포, 고민)가 결합되어 “불안, 공포, 고민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갖게된 securus에서 유래된 말이다. 국가 또는 정권차원에서 불안, 공포, 고민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국가 또는 정권이 위협에 직면하여 최소한 위협이 발생되기 전의 안정된 상태 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安保라는 것은 국내외로부터의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諸價値를 保全할 뿐만 아니라 이를 伸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안보의 주요 관심 대상을 기존가치의 보호 뿐만 아니라 장래에 획득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울프스(Arnold Wolfers)의 정의⁶⁾와도 一脈相通한다. 즉 국가안보 개념은 한 국가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 개념은 방위적, 수세적 또는 소극적인 의미로 파악된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배후적인 기본논리는 마찬가지로 방위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방위

6)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in Eugene J. Rosi, ed., *American and Detente* (New York: Dodd Mead, 1973), p. 44.

적 또는 수세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라는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일국가가 현재 처해있는 상태의 유지 또는 보존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안보상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한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파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攻擊行爲를 통해 失地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회복하였거나 회복하려고 할 때 이러한 행위는 현상유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현상타파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민족분단을 고려할 때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목표행위는 현분단 상황을 현상으로 본다면 다분히 현상타파적인 행위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현상타파적인 행위라고 해서 방위적인 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 군사정책상 공격성향을 띄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은 對南韓의 군사적 행위에 국한된 것이지 결코 美·日·中·蘇에 대하여 무한정 自國安定維持權을 확대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자를 한정적이고 조건부적인 현상타파행위라고 한다면 후자를 보편적이고 무제한적 현상타파행위이며 팽창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락과 같은 제한적 타파행위는 광의의 방위개념(기존 이익 즉 김일성 정권의 보호 및 확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가 본질적으로 방위적인 것이라 한다면 안보

7)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원, 1990), pp. 3~6.

문제는 威脅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협을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안보 공감대 형성을 좌우한다. 위협이 잠재적이든 현재적이든 그것에 관련된 사항이 국가안보논리 체계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안보논리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다른 하나는 발견되었거나 거론되고 있는 위협에 대처하여 무엇을 보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국가안보의 客體的 側面이다. 위협이 제기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위협이 겨냥하고 있는 要諦가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들은 대부분 위협의 발생을 감지하게 되면 그것이 목표로 하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의 방위활동을 하게된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의 객체적 측면은 현실적 위협론과 더불어 해당국가의 안보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기본토대가 될 만한 것이다.

위협과 안보대상은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간파되고 인식되어야 비로소 여기에 관련된 제반행위가 실시될 수 있다. 그 ‘누구’를 파악하는 것이 곧 국가안보의 주체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의 주체는 국가유형별로 국민일반이 될 수도 있고 정부 또는 일인 통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국가안보의 이론적 기본 체계는 3가지 측면 즉 安保行爲者(主體), 安保對象(客體), 威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안보 역시 세가지 국면 즉 安保의 主體, 客體 그리고 威脅 등의 기본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북한 안보의 기본 논리구조

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北韓 安保의 主體: 김일성 vs 國家

安保의 主體라 함은 안보에 관련된 諸行爲의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안보란 國家安全保障(national security)을 줄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안보의 담당자가 國家임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안보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유일한 관련 담당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를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실제로 안보에 관련된 위협의 실체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라든가 실제 위협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제의 권한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음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추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안보를 국가가 담당한다거나 대표한다고 할 때 국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국가유형에 따라서 국가를 명분으로 하는 담당자 또는 담당층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사회가 갖는 특정 권력구조,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특정개인으로 존재하는 君主일 수도 있으며 보다 더 보편적인 근대적 의미의 정치제도하에서는 內閣 또는 政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북한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관 또는 모든 공공단체에 대하여 지도적인 핵심

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구조는 곧 노동당의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黨優位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은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집행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⁸⁾ 그러나 북한 통치방식의 특징은 북한사회의 모든 면을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노동당의 독재체제라기 보다는 김일성 개인의 獨裁가 黨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일성은 그의 일인독재 우상화체제를 통하여 수십년간의 긴 세월 동안 북한을 통치해왔다. 김일성은 지금까지 수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총비서, 국가주석, 그리고 군통치권(현재는 김정일에게 정식으로 이양되었음)을 한 손에 장악한 일인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다. 당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인민의 통일 단결의 중심이다.”⁹⁾

이와 같이 김일성이 모든 권력구조의 정점을 점유하고 있는 정치체제는 맑스가 말하는 권력엘리트의 그것 보다도 훨씬 더 통합된 權力의 複合體를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프리드리히(C. J. Friedrich)와 브르제진스키(Z. Brzezinski)의 표현을 빌리면 전체주의

8) 極東問題研究所 編, 「北韓全書」 上卷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 101.

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적 독재에 있어서 극단적 변형이라 하겠다.¹⁰⁾ 김일성은 이같은 강력한 전체주의의 劃一的인 意思決定構造에 힘입어 그에 대한 개인 숭배를 이끌어 냈다.¹¹⁾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절대적 권력체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대중조작은 바로 획일적인 권력구조에 힘입은 바크며, 실제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해서 항일유격 및 혁명신화를 날조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면서 金日成家の 혁명전통을 조작하여왔던 것이다.

김일성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우상화의 결과, 김일성 수령의 의사는 곧 最高權을 의미한다. 김일성이 전쟁을 하거나, 동맹을 맺거나, 영토를 병합하고, 어떠한 외교정책을 채택할 경우 그것은 유일적 영도라는 측면에서 북한인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북한인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자신이 국가를 대신하여 “착취와 억압으로 부터 해방된 노동자, 농민, 병사 그리고 근로 지식인들의 이익을 방어하고 보호한다”고 철저히 믿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안보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0) 황성모 외, 「北韓體制研究」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p. 95.

11) 안드레아스 크라체크 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서울: 증원문화, 1990), pp. 14~15.

2. 北韓 安保의 客體: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vs 北韓 社會主義 體制

安保의 客體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은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가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무엇(안보 객체)을 保全함으로써 국가가 存立(국가안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對內的 諸價値',¹²⁾ '국가의 영토, 정치제도, 문화',¹³⁾ 그리고 '사회구조를 둘러싼 국가 체계'¹⁴⁾ 등을 外部威脅 또는 潛在的 敵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安保가 뜻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대변되고 있는 안보의 객체들은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옹호 또는 보전하려고 하는 국가이익은 구체적인 실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전보장(국토의 안전 또는 이념 및 체제의 안전)과 번영(경제발전 및 복지향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심적 국가이익은 김일성 지배체제의 보존, 사회주의의

12) Morton Berkowitz and P. G. Bocks,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A Reader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p. x.

13) Hans J. Morgenthau,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Berkowitz and Bocks,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p. 35.

14)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2nd ed., (New York: John Wiley Sons, 1967), p. 152.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¹⁵⁾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외면상으로 표현·설명하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안보의 실질적인 객체는 특정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용사나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상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객체를 단순히 논리상으로 그럴듯하게 묘사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공식적인 표현은 自己合理化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만 내거는 안보의 객체는 실질파악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김일성우상체제 강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고려해 볼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독립유지, 남북통일 및 경제적 번영 등은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보존·확대하기 위한 수단적 요소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보존·확대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김일성정권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제

15) 레빈,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이흥구·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의 世界: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法文社, 1986), pp. 285~86.

16)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p. 23.

까지 국익의 우선순위를 김일성 정권의 보전·확대에 두고 국가독립의 유지와 한반도 통일의 완수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제개발 및 군사증강정책을 고수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992년 4월 9일 북한의 수정헌법 제9조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여기에서 보면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을 대신하고 있는 김일성 정권의 강화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 이외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및 ‘조국통일’요소는 김일성정권이 존재하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 그것들은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다그칠(제14조) 뿐만 아니라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제12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칭하는 사회주의는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즉 김일성주의를 지칭하고 있다. 김일성은 1955년말 당사상 사업에서 “활동에 있어서 혁명적 진리인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소련과 동일하게 하지 않

으면 안되는 원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다든가 중국식이 좋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식을 만들어낼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우리식’ 즉 주체주의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주체주의를 1965년 4월 인도네시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체를 세우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주로 주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진리와 국제혁명운동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나가는 현실적이고 창조적인 입장이다.¹⁷⁾

이후부터 주체사상은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해석과 내용변화를 거듭해 왔다. 주체사상의 강조에서 1980년대 후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부각은 환경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면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강화를 합리화시켜 주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¹⁸⁾ 실제로 주체사상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정통성 수립과 김일성 개인숭배의 합리화,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의 並進政策을 위한 철저한 사회동원체제를 뒷받침하며 中·蘇紛爭에

17)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29.

18)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 91.

서의 자주노선과 실리추구외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임에 분명하다. 결국 북한이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변용과정을 통해서 보전 및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안보의 객체는 자연히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自體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국가안보의 객체를 “그 국가체계내의 주어진 사회구조”로 인식하는 카플란(Morton A. Kaplan)¹⁹⁾의 논리측면에서도 입증된다. 북한의 국가체계내의 사회구조는 곧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노동당이 지배하는 唯一支配體制로 구조화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안보의 객체는 김일성 唯一支配體制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유일지배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북한 안보의 목표인 것이다.

3. 北韓 安保에 대한 威脅

한나라의 安保에 대한 위협은 국내외의 군사·비군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위협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기인하는 위협도 무시할 수 없다.²⁰⁾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협의 유형으로는 정치불안 및 사회혼란, 경제적

19)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p. 152.

20) 최경락·정준호·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론-존립과 발전을 위한 대전략」 (서울: 法文社, 1989), pp. 29~35.

불안정, 범국민적 신뢰의 동요, 군부내의 동요 등을 들 수 있다. 외부적 위협이라고 한다면 기존 국가체제에의 도전 내지는 저지를 추구하는 외부적 세력 및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국가안보개념의 지배적 요소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구성요소는 자연히 군사위주 또는 군사편중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제3세계의 中小國家들은 군사·비군사를 포함한 국내외적 위협요소를 안고있는 취약한 안보적 현실에 직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안보객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외부적 위협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내부적 위협에도 직면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한편으로 주체사상을 이용하여 집단내의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여 동질화 시키는 데 주력함으로써 주민통합과 일체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안보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측면의 내부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체사상의 기능은 매우 효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안보의 내부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이용 외에도 군사적 수단을 필요로 해왔다. 실제로 북한은 對南武力赤化統一의 당위성과 외부 특히 미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과장하여 국방자위에 기초한 군비증강을 정당화하고 전사회를 兵營化함으로써 내부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다음으로 북한이 직면하게된 대외적 안보위협은 남한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의 직·간접적 위협을 포함한다. 북한은 남한을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의 대상이자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그리고 미국을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을 저해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적 현상유지의 붕괴를 노리고 있는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구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을 경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직간접적인 정치·군사적 간섭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노력해 왔다.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응해서 설립된 COMECON(Communist Economic Conference)의 회원이 되는것을 거부했다. 북한이 COMECON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은 自國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나 정치적 측면에 있어서도 동구국가들 경우처럼 구소련의 전일적 지배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시도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은 中·蘇紛爭 이후부터 獨自路線을 고집하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 부터의 안보적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북한이 중국과 구소련에 대해서 “큰 당과 작은 당은 있으나 높은 당과 낮은 당, 지도하는 당과 지도받는 당은 있을 수 없다”²¹⁾고 선언함으로써 중국과 구소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위태롭게하는 대외적 위협세력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남한 및 반미제국주의에서 출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 북한이 구소련과 중

21) 「김일성 저작선집 4」, pp. 346~47.

국에 대해서도 排他主義的 特性을 보여온 것을 고려할 때, 구소련 및 중국 역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 유지의 주요 위협세력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북한 安保의 主體, 客體, 威脅 등의 세가지 국면 모두가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安保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은 대남 적화 목표 뿐만 아니라 대내적 위협요소 및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직간접적인 대외적 위협요소를 축으로 하는 안보관련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안보정책의 한 수단인 군사정책²²⁾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상과 같은 안보논리구조를 유지해온 북한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군사정책을 전개해 왔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22) 일반적으로 군사정책은 국가안보정책의 주요한 한 수단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의 군사적 행위를 의미한다.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존하는 구체적인 핵심수단으로서 군사정책이 입안·수립된다. 달리말하면 국가안보는 군사정책의 거시적 목표가 된다. 이선호, 「國家安保戰略論」(서울: 정우당, 1990), p. 38. 그러나 북한의 안보는 김일성 정권안보에 집중되고 있는바 북한의 군사정책은 자연히 이러한 김일성 정권안보의 유지·확대를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수립·시행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겠다.

第 Ⅲ 章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

북한의 안보 논리구조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군사정책 역시 김일성 정권의 독점적 이익을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과도하리 만큼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면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해온 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보존 및 확대라는 정권안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은 김일성 政權安保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 화통일의 궁극적 달성을 통한 김일성 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고, ② 대내적으로 군비증강 및 전사회의 병영화 등과 같은 군사적 제 조치를 통하여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③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 제국주의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어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정책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1. 對南 武力赤化 統一戰略: 김일성 政權의 支配機會 最大化

북한은 1948년 국가수립 이래 한국을 韓民族의 대표를 겨루는 경쟁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므로 정부수립 이후 이제까지 북

한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중심전략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김일성 정권은 일단 남한을 무력적화 시킴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궁극적 지배의 기회를 최대화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북한인민의 최대임무로 상정하여 왔다. 북한은 당면목표의 하나로 남한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공공연한 대남적화통일 의지의 표명은 내부체제 단속을 위해서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남한의 적화통일을 통한 정통성 확보의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다.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성취시킴으로써 김일성 정권에 대한 주요 위협적 존재를 제거하여 김일성 유일지배기회를 확장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적 도발, 정치·경제적 경쟁 및 군비경쟁 등을 수행해 왔다. 물론 1950년 북한의 전면적 군사도발은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로 끝났으나 정치적·경제적 경쟁과 군비증강전략은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다. 특히 북한은 군사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軍需産業을 과도하리 만큼 확충·발전시키고 군비증강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군사적 기본입장은 변함없이 강력한 對南 攻勢的 樣相을 견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1950년의 전면적 도발이나 그 이후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 휴전선 일대의 땅굴 구축 그리고 크고 작은 대남 군사도발 및 테러 등 실질적 움직임

임의 차원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도발적이며 공격적 전략을 고수해온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대남적화 공격전략을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필요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54년 12월 23일 인민군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막론하고 군대를 강화함이 없이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조국의 독립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의지를 밝혔다.

2. 内部體制 鞏固化를 위한 強兵政策

북한은 “한나라의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²³⁾이라고 함으로써 군사적 방위능력은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주체성은 자주국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강국으로서의 높은 명성을 세계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가시적인 역량표출인 군사력을 의미하는 무장능력의 강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주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3) Chang Ha Kim, *The Immortal Juche Idea* (Pyo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1987), p. 324.

한 국가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나라는 발언권이 없다. 만일 한 국가가 국가방위를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면 그 국가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며 자유로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지각있는 자는 누구나 현재 국제정치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이러한 경우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북한은 이러한 國防自衛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4대군사노선을 펴오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군의 간부화, 군장비의 현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국방력 강화의 제 조치는 일차적으로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한 防衛手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 및 國際的인 發言權의 증대를 위한 수단 측면에서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높은 권위와 존엄을 떨치고”²⁵⁾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대내체제의 안정화를 구축해온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증강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인민해방전쟁을 위한 지원,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타국가들을 원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도록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북한은 強兵政策에 의한 “전군, 전민, 전국이 무장한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 어떤 군사대국도 조선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릴 수”²⁶⁾ 없는 주체나라임을 강조하여 국제적 위신을 증대하고

24) Ibid., p. 325.

25) 「민주조선」, 1993.5.8.

대내적으로는 전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사회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對中國·舊蘇聯 斷絶戰略과 國防自衛政策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두 강대국으로부터 심리적·정신적 개입의 간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군사적 침공과 같은 물리적 개입의 위협을 일찍부터 인식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그들의 중·소관계의 맥락에서 斷絶戰略(delinking)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²⁷⁾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몇달 후부터 스탈린의 우상숭배가 후르시초프에 의해 격하되기 시작하였으며²⁸⁾ 이러한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 영향은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먼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찍부터 反蘇 民族主義 감정과 수정주의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26) 위의 책.

27) 서재진,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61~71.

28) 후르시초프는 1956년 20차 당대회에서 인류의 진보적 지도자, 세계의 영감, 소비에트 인민의 아버지, 과학과 학문의 거장, 군사적 천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등의 최고의 찬사로 숭배되었던 스탈린이 사실은 과대망상증에 걸린 고문광이요, 대량 살륙자, 소련을 재앙으로 몰고간 군사적 무식쟁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p. 450~51.

후르시초프의 수정주의 성향의 정책표방은 결국 이러한 反蘇感情과 수정주의를 공식적으로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6년 당원, 지식인, 학생, 공장 노동자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과 계급들에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 혁명운동으로 발전한 헝가리의 대규모사건은 결국 소련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²⁹⁾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사태에 직면하여 2가지의 위협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우상숭배 비판에 대한 심리적·정신적 위협이요 다른 하나는 동구사회주의권의 사태에 소련이 무력으로 개입한 것과 같은 소련의 물리적 위협 가능성이다. 물론 북한은 소련의 무력개입을 ‘소련의 국제주의적 원조’라고 표현함으로써 소련의 위협에 대한 내심을 숨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소련의 개입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10월 28일 “사회주의를 옹호하자”는 제하의 로동신문 사설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조를 준다는 자만심으로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무관하다. 자본주의 나라간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원조’, 내정 간섭을 전제로한 ‘원조’는 사회주의 나라간에는 있을 수 없으며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나라의 원조는 그것을 받는 각각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강고히 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발전을 위한

29)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격동의 동구현대사」(서울: 좋은책, 1990), p. 197.

것으로 되어야 한다.³⁰⁾

또한 북한은 개인숭배비판 운동과 수정주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심리적·정신적 개입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숭배반대 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 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당, 형제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숭배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사람들에 의해 개인숭배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배격해야 한다.³¹⁾

결국 북한은 외부의 물리적 개입과 외부사조의 침투에 직면하여 차단과 단절 그리고 독자적인 사상무장 및 물리적 힘의 축적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오늘날 북한의 모든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으며 대외적 단절 및 패쇄성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맹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외세의 개입과 외부사조 유입으로부터 김일성 정권보존을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느꼈던 위협을 시사해

30) “사회주의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사설.

31) 위의 글.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980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국가의원동맹 대표자 협의회」에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에 거부감을 표시한 것은 그 침공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³²⁾

한편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를 북한과 같이 거부하였지만 中國式의 社會主義 建設을 위하여 文化革命을 추진하였는데 이것 역시 동구의 市民蜂起나 다름없는 밑으로부터의 상층 엘리트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나타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教條主義의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文化革命을 비난하였다. 북한이 중국의 문화혁명의 극단적인 성격에 심한 불안을 느낀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화혁명의 여파가 북한내로 파급되는 사태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³³⁾ 실제로 북한은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형제당들의 경험을 배우는 목적은 그것을 자기 나라 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중국의 教條主義를 추구하는 내부의 세력들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1967년 1월부터 중국이 홍위병을 통하여 공공연히 북한을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은 이에 맞서 중앙통신사 성명으로 중국의 북한 비난벽보에 대해 반박하였으며

32) 정진위, 「北方3角關係」(서울: 法文社, 1985), p. 175.

33) 위의 책, p. 145.

34) 「로동신문」, 1966.8.12.

그후에도 압록강, 두만강에 확장기까지 동원하여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난하였다. 물론 이러한 중국·북한 갈등관계는 1969년 7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인들과 하나의 전선에서 싸울것이다”라고 천명 함으로써 약 4년만에 해빙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있어서도 북한은 중국의 實用主義 대내외정책이 북한내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왔음에 분명하다. 특히 중국의 스탈린주의 및 모택동주의 정책비판이 북한내부의 테크노크라트로 파급되는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중국의 이데올로기 퇴조와 모택동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이 김일성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³⁵⁾

또한 중국·인도 국경분쟁, 중국·월남전쟁 등을 통하여 북한이 비록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지만 내심으로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못지않게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그들의 안보위협 인식은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 大國霸權主義에 대한 위협의식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해 主權尊重, 大小霸權主義 反對 등을 골자로 하는 統一團結戰略을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⁶⁾

35) 정진위, 「北方3角關係」, p. 193.

36) 북한은 1979년 1월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침공으로 캄보디아의 프놈펜이 함락되자 1979년 1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침공은 캄보디아에 대한 엄

특히 북한이 “어떤 사람들은 원조에 빙자하여 형제당, 형제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고 있다. … 더우기 소위 <개인미신반대> 운동을 다른 당들에게 내리 먹이려 하며 그것을 간판으로 하여 형제당, 형제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나라들의 당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³⁷⁾고 지적한 것은 중국·소련을 겨냥한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 및 대국주의자들의 ‘응당한 반격’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중국·소련으로부터 비록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해 오면서도 자주성을 강조하여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심리적 차원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의 自主路線은 중국·소련의 대국주의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전히 벗어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수

중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배신이며 국제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지배주의에 대한 반대”와 “폴포트 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로동신문」, 1979.1.12; 북한 당국의 베트남 침공에 대한 공개적 비난은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극도로 자제해온 전례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 자신이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타 사회주의국가 특히 국경을 함께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으로부터 고유의 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Robert Charvin, Albert Marouani,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p. 34 ft. 44 참조.

37) 「로동신문」, 1963.10.28.

호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는 군사부문에 있어 국방의 자위정책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國防自衛政策은 2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통한 “남조선 해방”과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그들의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며 조선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소의 군사원조를 최소화하여 자체의 역량에 보다 의존하고자 하는 의도와 북한에 대한 중·소의 무력개입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있다. 전자의 경우 북한은 군사원조를 불모로한 중·소의 대국주의적 간섭의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³⁸⁾은 “오늘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자기의 견해와 로선을 다른 당들에 강요하며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다하여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음을 우려하면서 “우리 당도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온갖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대국주의를 경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자주노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사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은 후자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38) 「김일성 저작선집 4」, p. 348.

4. 對美·日 防禦政策

관문점 휴전협정 이후 북한은 미국에 의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에서 이중으로 포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완전고립시켜 왔으며 유엔기구의 무대에서 북한을 '평화 파괴' 국가로 낙인 찍히게 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 뿐만 아니라 미·일 안전협정(1960.1)에 의해서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었다. 사실상 미·일협정은 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 한국 관련조항³⁹⁾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의 복잡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한국동란중이나 이후 미국의 여러 정치지도자들의 강경한 조치를 통하여 북한을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데 대한 평양정권의 태도이다.

39) 동조약 제4조에 “일본국의 안전과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양국(미·일)중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조약 6조에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극동에 있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극동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 협력의지를 구체화 하였다.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p. 293 일본의 방위관련 조약 및 문서 참조.

1961년 4월 17일 북한은 북한 외상 박성철이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미국정부는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유린하였으며 유엔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해치고 있다. ... 미국정부는 유엔의 이름을 사취하여 한국전을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남한을 점령함으로써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유엔기구는 헌장의 정신에 따라 미국의 군대는 물론이고 모든 외국군대를 남한으로부터 철수토록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한국의 문제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며, 한국인들의 내부문제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인정될 수 없다.⁴⁰⁾

여기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한결같은 강경자세와 적개심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미국에 의해서 주로 부추겨지고 있는 적대세력들에 둘러싸여 안보적 결핍을 심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이러한 안보적 결핍 인식은 한국내의 미군주둔의 현실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개입으로 한반도 무력통일의 꿈이 좌절된데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그들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김일성 자신의 솔라즈(Solaz)의원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40) Documents officiels de l'assemblee generale de l'Organisations des Nations Unis, Annexes, Point 21, 15 ème session (New York, 1960-1961), p. 2.

내가 이자리에서 남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내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⁴¹⁾

북한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해계모니 장악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영구히 정복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직접적 對美 威脅認識 외에도 남북한 상호간의 무력충돌시 미국의 확고한 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만큼 더 큰 안보의 결핍을 수반하고 있는 셈이다. 지하시설물 설치, 군사기지와 주요산업시설 요새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미 안보위협 인식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일본의 전략관계는 미국의 위협과 같이 직접적 이라기 보다는 미·일 안전보장체계와 한·미상호안보체계간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물론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지배하여온 역사를 고려하여 볼 때 일본의 직접적 위협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전혀 배제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자국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미에서 지역방위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정

41) Stephan Solaz,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July 12~21, 1980*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참조.

치·군사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하려는 징후를 크게 보여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군사력 구축만으로도 북한을 불안케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것보다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경제 그리고 특히 방위산업을 강화시킴으로써 군사력 증강에 일조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와 나아가 이러한 경제관계를 넘어선 한·미·일 군사적 연대성 강화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극동에서 일본, 미국 및 남한이 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러한 우려는 미·일협력체제에 대한 고전적인 우려에 더하여 한국과의 상호유대 강화조짐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1981년 1월 9일 노동신문의 “사악한 도발계획”⁴²⁾이라는 제목하의 논평기사에서 북한은 일본이 군수회사를 통하여 남한에 “암암리에 다수의 곡사포 및 박격포들과 대포의 부품들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중화기의 제조를 위한 기술문서들을 제공하였”음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본의 지원에 힘입어 남한의 ‘괴뢰도당’을 전쟁과 파시즘, 특히 북한에 대한 “모험에 찬 군사도발”의 획책이 고무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미합동 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도발적 연습의 基地가 되고 있으며 일본이 동훈련의 참가부대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위한 미제국주의자들의

42) 「로동신문」, 1981.9.1.

준비에 일본이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⁴³⁾ 이라고 강변함으로써 또다른 일본의 위협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인식은 남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인식과 연결될 때 보다 심화된다.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 밀접한 군사적 연대를 강화할 때 북한의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일의 직간접적 위협을 유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對美·日關係를 개선하려는 실질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으로는 군사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위체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대군사노선의 하나인 전국토의 요새화 및 군장비의 현대화는 북한이 美·日을 포함한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防禦政策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전국토의 요새화 노선에 따라 비무장 지대의 요새화는 물론 주진지 및 주요전략기지 요새화와 더불어 자연지리적 조건에 적절하게 북한 전역을 거의 防禦施設化하고 공중공습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산시설 역시 최대한 지하화 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군장비의 현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다. 핵무기가 사용상의 利點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유함으로써 상대방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는 점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개발은 韓·美·日 안보체제, 특히 美國의 위협을 무력화 시키는 방어전략 구축에 있어서 효용성이 제고될 수

43) *Pyongyang Sinmun*, January 11, 1981 in *FBIS*, Jan. 12, 1981.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小結論: 軍事力 增強政策과 政權安보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김일성 정권안보 측면에서 대남적화통일 및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나 남한을 비롯한 그들의 대내외적 위협인식의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남한을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하여 15만에서 20만에 달하는 군병력을 증강시켰는가 하면⁴⁴⁾ 이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구소련으로부터 중무기, 전차, 전투기 등을 대대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 김일성 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벌인 대남 군사적 행동이었으나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 강화보다는 경제적 재건을 비롯한 전후복구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에 있어서 북한 인민군의 증강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⁴⁵⁾ 동시에 군사비 지출 또한 오히려 하향 조정된 것으로

44) Vreeland & Shinn, et al.,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314~15.

45) 북한의 병력증강은 정전당시 26~27.5만명에서 1955년 41만명 이상으로 증강되었으나 1956년에는 오히려 8만명이 감축되었다. 이종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박재국 외, 「北韓軍事政策論」(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3), pp. 248~49.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 전쟁으로 인한 자체국력의 고갈 뿐만 아니라 美軍의 介入으로 인한 대남무력적화 통일 가능성 약화 그리고 전후복구를 통한 대내체제정비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군사력 증강 보다는 경제건설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북한이 이러한 先經濟建設 後國防強化 政策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한국전에 참가한 중국군 6개사단의 지속적인 주둔 그리고 구소련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긴밀한 유대 존속을 기반으로 한 양호한 안보환경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들어와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62년 12월 10~14일 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것에 대한 의제 토의에서 “경제발전에서 일부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피력한 ‘조성된 정세’라 함은 1958년 중국군의 완전철수 및 후르시초프의 우상숭배주의 비판과 수정주의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의 대외적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김일성에게 있어서는 개인숭배 비판운동과 수정주의가 북한에 침투하지 못하게 정권을 수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급선무로 대두하였다. 외부사조 차단과 사상무장 강화 등의 제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무렵부터였다. 그것은 곧 차단과 단절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구체화되어 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⁶⁾ 이러한 對蘇聯 斷絶戰略은 이제까지 군사적으로 크게 의존하여 왔

던 관계의 재고를 요구했고 이것이 결국 주체사상을 기반으로한 國防自衛 政策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66년 경부터 중국에서 일어난 文化革命은 김일성에게 구소련의 우상숭배비판 못지않게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⁴⁷⁾ 김일성은 중국의 文化革命 역시 그의 정권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히 구소련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기존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탈피하여 여러 분야 특히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1960년에 들어서 그들의 군비증강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하게 된 시기가 바로 중국이 문화혁명기에 접어들기 시작할 무렵부터였다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⁴⁸⁾ 동시에 1965년 미국의 월남전 확대와 韓·日 국교정상화 등은 북한측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966년 10월 5일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에서 북한이 월남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제와 일본 사또정부와 남조선 괴뢰도당 사이에는 쌍무적 군사협정들을 통하여 사실상 3각 군사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⁴⁹⁾라고 한것은 한·일 국교정상화와 월남전의 가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협인지도의 증가를 반영

46) 서재진,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p. 66.

47) 위의 책, p. 69.

48)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리영희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원, 1992), p. 26.

49) 「김일성 저작집 20」(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385~87.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들어서 북한은 이전의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체의 체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구소련 및 중국 뿐만 아니라 美·日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自救策이 바로 國防自衛路線 構築이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국방자위노선은 중국 및 구소련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군사적 自救努力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북한의 군사정책은 공격적 성격 보다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북한은 1967년 이후부터 무력도발 회수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특히 1968년 1월 23일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1969년 4월 14일 EC-121기 격추사건을 통해 그들의 공격적 성격을 띤 군사정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軍事的 冒險主義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가시화되었다. 1973년의 서해 5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무력시위, 1974년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공격 및 납치행위, 판문점과 휴전선 지역에서의 잇달은 무력공격, 그리고 1974년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차의 암살 기도 등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모험주의는 과연 그들의 대남무력적화전략의 실질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이제까지 한국측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직접적인 대남무력적화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정책을 본격화해왔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북한이 60년대를 걸쳐서 국방자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결과 어느 정도 자신할 만한 군사력을 증강시켰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68년 4월 전국 청년 총동원 대회에서 “지금 우리에게서 튼튼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꾸려져 있으며, 조국방위에 필요한 여러가지 군수품을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바가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의 괌 선언(Guam Doctrine)이후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시화 됨으로써 초래되는 미군의 대남방어의지 약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 중반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함으로써 인도차이나의 공산화 통일은 북한의 ‘적화통일’의지를 한층 더 부추긴 것이라 추측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기부터 증가되어온 북한의 대남 또는 대미테러행위 들은 적화통일을 위한 공격전략의 직접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산발적인 공격행위를 통한 우회적 적화통일전략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강관계는 1960년대에 비해 陣營中心의 운용이 보다 더 어려워졌다. 미국과 구소련 간의 데탕트체제는 보다 심화되어 갔으며 중국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였다. 이러한 4강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를 약화시킬 주요한 요인임에 분명하다. 북한이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중국과 구소련의 직접적인 지원 가능성은 훨씬 희박해져 갔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對韓·美 테러를 감행해온 것은 적화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군사적 목적 보다는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로부터 反美感情을 부추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고자한 의도로 해석된다. 즉 북한은 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대남적화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정치적 지지획득 노력을 펼쳐왔으며 그들의 과감한 반제국주의 즉 反美主義 테러활동은 이에 공헌한 바가 크다. 북한은 非同盟運動을 통해서 반제국주의세력을 강화하고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을 고립시켜 미국의 힘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김일성을 대내적으로 북한 인민들로부터 조선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혁명적 지도자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해 왔다. 북한은 김일성이 인민의 한량없는 존경, 사랑, 충성을 향유하는 지도자로, 또한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국가, 심지어는 자본주의세계의 진보적 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는 지도자로 인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미국 또는 남한정권을 겨냥한 북한의 테러활동은 비동맹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일성의 지위를 확립, 양양, 과시하려는 욕망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김일성의 대내적인 정치적 정통성 확보를 통한 政權鞏固化 政策과 연결된다. 나아가 북한정권은 그들의 도발행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미국 및 남한의 응전태세를

역으로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안보위협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동요를 방지하고 대내적 단결을 도모한 측면을 강하게 표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이같은 북한의 “공격적 방어”⁵⁰⁾ 군사정책은 김일성 정권안보 차원의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을 위해서나, 대내외적 위협으로 부터의防禦를 위해서는 최선책이었는지는 모르나 이는 결국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온 경제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으로 하여금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정책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50)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1), pp. 141~52.

第 IV 章 北韓 安保環境의 構造的 變化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변화한 한반도의 대내외 안보환경은 북한의 안보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북한의 군사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북한의 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가 어떠한지,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향후 어떠한 類型의 軍事政策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1. 對外的 環境

美國과 舊蘇聯을 주축으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였던 冷戰體制는 구소련이 붕괴함으로써 새롭게 재편되었다. 냉전기간 중 국가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명확한 특징을 보였다.⁵¹⁾ 즉 당

51) 1953년까지만 하더라도 냉전관계의 특징은 미국과 구소련간의 절대적인 적대관계와 양블록간의 교류의 완전한 차단 등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 동서 양진영간의 평화공존개념이 등장함으로써 각 진영내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과 구소련간의 갈등이 표출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연합관계는 점차 약화되어갔으며 이후 세계 사회주의 체제는 보다 느슨한 관계로 유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간의 관계는 양진영 각각의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해온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Phillippe Moreau Defarges,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ans le Monde d'Aujourd'hui-*

시의 국제관계는 동맹관계 아니면 적대관계 그리고 중립관계로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간의 관계규명이 비교적 단순·명확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세계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는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함으로써 상호 밀착되어가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東歐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 역시 냉전구도를 이탈하여 그들의 직접적인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 그결과 신국제질서⁵²⁾하의 국가간의 관계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대립관계의 浮上으로 인한 혼란상을 보이는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향후의 국제관계는 오늘의 우방국이 내일의 적대국이 되고, 그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되는 可變的이며 二重的인 특성과 냉전 시대에 비하여 군사적 동맹의 중요성이 약화되며, 국가간의 관계가 협력과 경쟁요인의 혼재로 말미암아 한층 더 모호해지고 있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⁵³⁾

Conflict et interdependances (Paris: Editions STH, 1987), pp. 19~45.

52)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라는 용어는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을 개전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나 부시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발언(1992년 4월 연설)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새로운 국제질서의 개념이 밝혀졌다. "세계질서라는 것은 작고 큰나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몇가지의 원칙을 굳게 지킨다는 결의를 기초로 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희망에서 나왔다. 그러한 원칙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침략에 대한 일치된 단결, 무기의 삭감과 제한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에 대한 정의에 기초한 대우이다."

북한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는 정부수립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도전임에 틀림없다. 냉전체제는 세계사회주의체제 구조를 통하여 북한에게 피난처, 단결성 구조, 그리고 미국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인 군사적 방어체제를 제공해 준 것이었다. 특히 북한이 비록 주체사상에 기초한 對外的 自主路線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구소련의 존재는 김일성 지배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 조건이 되어왔던 것이다. 구소련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공격의 저지세력이 되어왔으며 북한의 국방자위를 위한 막대한 군사원조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많은 물질적 수단을 원조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함으로써 북한은 냉전체제에서 누려오던 이러한 利點들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국제적 정치지위 제고를 위해 크게 기여해왔던 非同盟勢力 또한 약화됨으로써 한층 더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구소련이 남긴 공백을 주변의 유일한 親北韓 사회주의 강국인 中國이 메꾸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구소련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국인 중국과도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해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기존의 적대국으로 인식해왔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매우

53) 李善浩, 「新韓國國防論-신세계 질서와 한국 국방의 당면과제-」(서울: 정우당, 1993), pp. 222~23.

전향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전방위의 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관계가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의 군사정책에 미칠 영향이 어떠한가를 밝혀보기로 하자.

가. 北方三角關係의 變化와 中國·러시아의 對北韓 軍事支援 減少

신국제질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북한의 정치, 경제적 측면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북한의 국제안보협력체제는 북한·구소련 및 북한·중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기초로한 北方三角關係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그들의 주변여건이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인식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언제든지 북침할 의사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한 및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이끌고 있는 최대의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비난해왔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북한은 1961년 이래 미제국주의로부터의 防禦와 對美 軍事戰略의 필요성이라는 冷戰的 思考를 공유했던 中國 및 舊蘇聯과 군사동맹 관계⁵⁴⁾를 유지해 왔

54) 1961년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시 소련, 중국

다. 이러한 관계는 냉전시대의 산물이었으나 中·蘇의 이념분쟁, 美·中 관계개선,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의 탈냉전, 신데탕트의 움직임 등을 거치면서도 존속해 왔다.

예컨대 中國은 구소련을 견제함과 동시에 美國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 北韓의 군사적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여 왔다.⁵⁵⁾ 반면 구소련은 美·蘇冷戰과 美·日·中 그리고 韓·美·日의 안보협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對北 군사지원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1954년부터 1980년까지 中·舊蘇聯의 對北 군사원조는 각각 561백만달러, 1,796백만달러이며, 舊蘇聯의 對北 군사원조가 中國의 약 3배 정도였다.⁵⁶⁾ 내용면에서도 최신 군사장비를 비롯한 고성능 무기는 주로 구소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특히 80년대 들어와서 구소련의 對北 고성능무기 제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舊蘇聯의 對北 군사적 이용이 증대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1984년 舊蘇聯 외무차관 카피차는 청진항의 對蘇開放을 요구하였고 그 후 합동군사훈련도 제의하는 동시에 자국함정의 남포항(서해안)기항과 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권을 요구하기도

의 즉각적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북방삼각관계는 군사동맹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55) 차영구, “북한과 중·소간의 군사협력 - 북한의 대 중·소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이흥구·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의 세계」, pp. 309~28.

56) 北韓研究所,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449;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外交論」(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77), p. 33 참조.

하였다. 실제로 北韓은 무기이전의 댓가로 舊蘇聯의 요구를 대부분 수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80년대 舊蘇聯의 對北 무기이전 현황과 對北 요구의 수락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1980년대 舊蘇聯의 對北 武器移轉 現況과 對北要求 受諾事項

연도	이전 무기명	수량	구소련 대북 요구수락사항
1981	Frog-5/-7 지대공미사일	15	
1982	MIG-21 전투기	40	
	MI-4 헬기	20	
1983	IL-62 수송기	1	
	Osa-1급 고속공격정	2	
1984	SA-2 지대공미사일	550	TU-16/95정찰 및 폭격기의 북한내륙통과비행 및 기착권 인정 (84.12)
1985	MIG-23 전투기	50	나진항에 이어 원산항 기항권 인정 (85.8)
	SCUD-B 지대공미사일	15	
	SA-3 지대공미사일	30	
1986	SU-7 전투기	10	남포항 기항권 인정 (86.7)
	MI-24 헬기	50	
1987	SU-25 근접지원기	10	
	SA-5 지대지미사일	확인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0~1981, 1981~1982, 1982~1983, 1983~1984, 1984~1985, 1985~1986, 1987~1988, 1988~1989 참조.

나아가 北韓·舊蘇聯 兩國軍은 상호방문 및 연합훈련도 실시하였다. 구소련함대 및 비행단의 방북(85.8, 86.7, 87.5 등)과 北韓 艦隊 및 비행단의 訪蘇(85.5, 86.7 등) 그리고 1986년 10월이후 세차례의 해·공군 연합기동훈련 실시 등이 그것이다. 현재 北·舊蘇聯 간의 전략무기체계는 거의 통일되어 있으며 〈도표 1〉에서와 같

이 舊蘇聯으로부터의 무기이전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⁵⁷⁾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시작된 新思考 外交政策에도 불구하고 1990년 韓·蘇修交 이전까지, 소련과 북한 간의 군사적 우호관계는 계속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군사대표단의 상호방문은 계속되었다. 더욱이 極東에서의 구소련 軍事力의 질적·양적 강화는 세계적인 탈냉전·신데탕트에 반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역량이 되는 것으로 여겨졌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구소련의 對北 軍事援助는 韓·蘇修交 및 소련의 내부변동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되었다. 1990년의 韓·蘇修交, 그리고 1991년 8월 보수강경파의 쿠데타 실패에 이은 공산당과 군부 보수파의 몰락은 北·舊蘇聯 군사동맹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에 의하면 “지난 89년 한·소 양국이 상호영사처를 개설한 직후부터 북·소 군사협력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소수교 후 한국이 經協資金 30억달러를 제공기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격용 무기판매의 중지를 요청해 구소련이 이를 받아 들인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⁵⁹⁾고 한다. 이로써 구소련이 지난 1988년 북한에 미그-29기 5대를 비롯, SU(수호이)25 프로그램프트 10대 등을 제공한 이후 첨단무기의 제공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1989년 9월 동해에서의 합동훈련 실시

57) 國防部, 「1990년대 북한-소련관계연구」(1988.12), pp. 20~22.

58) 國防部, 「國防白書」(서울: 國防部, 1990), pp. 47~48 참조.

59) 「中央日報」, 1991.10.30.

후 합동군사훈련도 중단되는 등 군사협력이 단절되었다.

더욱이 구소련 개혁파들에 의한 경제발전 노력은 소련의 군축을 가속시켰다. 이러한 조치가 가장 가시적으로 표출된 것은 1991년 9월 28일 부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술핵 감축 선언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군비감축선언(10.5)이다. 구소련은 미국과 같이 지상발사 전술핵 완전폐기, 해상 및 잠수함발사 순항 미사일의 본국회수, ICBM의 단탄두화 추진, 잠수함 발사 전략핵 위주의 핵억지 전략 중시 등에 더하여 일부 공중발사 핵무기의 회수, 1년간 핵실험 중지, 새로운 핵무기 개발중단, 병력 70만명(전체 병력 3,988,000명의 17.5%)의 감축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1991년 11월 5일 노보질로프 구소련 극동군관구 사령관은 아시아 주둔병력 20만명의 추가감축을 표명함으로써 극동군사력 감축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구소련의 이러한 군비감축은 그들의 경제난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군재편과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 1991년 10월 4일 미국방부가 발표한 「過渡期の軍事力」이라는 題下の 소련 군사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이래의 심각한 景氣沈滯(1991년 들어 90년 同期 對比 GNP 성장률이 -2%에 이어 1/4 분기 -8%, 상반기 -10%, 1-9월간 -12%로 急落趨勢에 있음)에 따라 구소련의 90년도 군사비 지출은 89년 對比 6% 감소했고, 88년 對比 12%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구소련의 전반적인 군비감축은 대외군사원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연결되어 冷戰構造와 中·舊蘇聯 葛藤關係를 전제했던 對北 軍事協力關係까지도 변질시켰다. 기존의 냉전구조가 해체되

고 中·舊蘇聯 葛藤關係가 화해관계로 대치되어 감에 따라 자연히 북·구소련 군사동맹 역시 유명무실하게 되어갔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심각한 국내정치·경제적 혼란에 직면해왔으며 국제적 위상도 과거 어느때 보다도 저하되어 왔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적여건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정책은 자연히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입안·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따라 향후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결과 舊蘇聯을 이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주로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실질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상호간의 군사적 유대는 상황에 따라 폐기되거나 재편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의 변질을 보완해 나가기 위하여 중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키려 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의 조성 및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 증진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의외교추진의 거점확보 등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목표하에 기존질서의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입장보다는 자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에 부합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

향에서 주변환경을 조성해간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⁰⁾ 중국의 이와같은 대외적 태도변화의 대표적 예는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간의 국교수립에서 찾아볼 수 있다. 韓·中修交는 중국의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전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약화시켜 나갈 것이 예상된다.

특히 中國은 韓·中修交 발표 이후 한국전 개입에 대해서 자국의 국경지대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용군을 파견하게 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발할 경우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없는한 자동적으로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중국은 북한의 군사지원을 묵살해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원조까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2월 중국이 북한에게 대중국 수입대금을 바터형식이 아닌 硬貨決濟로 바꿀 것을 재차 요구함으로써 중국·북한간의 경제협력관계도 기존의 사회주의 동맹관계의 틀을 벗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한 인근 사회주의국가로서의 기존유대관계와 전략적 중요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원하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어느정도의 對北 경제지원을 비롯한 軍事支援을 떠맡지 않을 수 없기는 하다.⁶¹⁾ 그러나 중국

60) 정규섭·강원식·문홍호,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17~18.

의 대북 군사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군사기술 및 장비의 對北援助가 소련의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北方三角關係 변화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北·美, 北·日 관계개선을 통한 南方三角關係의 약화 또는 희석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처해왔다.

나. 北·日, 北·美 關係改善의 不透明과 北韓의 核問題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韓·美·日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유대관계(南方三角關係)를 이완시킴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 북한은 적극적인 대미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한·미 동맹관계의 약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지위향상 및 경제적 실리를 꾀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주한미군의 존재이며 동시에 이것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있어서도 가장 장애물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선적

61) 중국은 1993년 7월 25일 휴전 40주를 맞아 요령성 단둥시에 6·25 당시 중국군 참전을 기념하는 「抗美援朝紀念館」을 개관하는가 하면, 이에 참석한 당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인 호금도를 단장으로한 중국 대표단을 7월 26일 북한의 휴전기념행사에 참석케 함으로써 중국의 對北韓 支持意志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內外通信」, 1993.7.27.

으로 대미관계개선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단계적 감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북한은 미·일동맹, 對韓 방위공약 준수 및 核雨傘保護를 기초로한 韓·美·日 三角軍事同盟體制의 이완 또는 와해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더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對美 關係改善 정책은 닉슨독트린의 선언과 1972년 2월 닉슨의 訪中, 1972년 9월 일·중국교정상화 등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보다 적극화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70년대 중반 이전의 적대관계 또는 소극적 인민외교 추진에서 벗어나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간 접근교섭으로 보다 활발한 대미정책을 펴왔다. 특히 7·7선언후 레이건 행정부가 비자규정을 바꾸어 북한 체육인, 학자, 문화인 등 민간차원에서 미국의 방문허용, 미국인의 북한방문 제한완화,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한 교역허용 그리고 미국외교단과 북한 외교관의 접촉완화⁶²⁾ 등 4개항목을 포함하는 대북한 완화조치를 발표한 이후부터 참사관급 접촉을 가져왔다. 나아가 미·북한 양국은 상호 교류 및 방문을 활발히 진전시켜 왔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수출과 스포츠 교류,⁶³⁾ 재미교포와의 경제교류도 어느 정도의 진척을 보게

62) 「東亞日報」, 1988.11.1.

63) 美 상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1990.1.22)에 따르면 미국은 1989년 7월 초부터 대북 상업수출을 시작하여 1989년까지 84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또한 북·미간의 스포츠 교류는 19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미국이 선수단을 파견한 이래 1990년 10월 12일 북한의 국가대표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벌임으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대미접근 훨씬 이전부터 인적·물적 교류 증대 요구를 주요 요소로한 對日 接近政策을 추진해왔다.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진척은 北·日 접근시도기(1954~50년대말), 對日敵對와 소극적 접근기(1950년대말~70), 정당·인민외교 및 경제교류 추진기(1970~78), 정부간 교섭 타진기(1978~88)를 거치면서 1990년 9월에 비로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로 국교관계를 수립해야함을 인정”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대일관계가 수교교섭단계에까지 진입하게 된것은 80년대 후반이래 한국이 北方外交에 노력을 기울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南方外交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가서 북한이 대일 관계개선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전통적 맹방인 중국과 구소련과의 관계변화에서 기인되는 외교적 손실보상과 함께 한·미·일 삼각관계에의 침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치, 외교적으로 동북아 역학관계의 변화에의 적응과 이미 약화된 북방삼각관계의 보완을 위한 방편으로 북한에 있어서 南方外交의 창구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일본자본 및 기술도입은 9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90년, -3.7%)을 기록하여온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도 크게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개발의혹의 증폭과 함께 이에 대한 미·일의 공

로써 두차례의 기회를 가졌다.

통된 저지 의도로 인하여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북한의 美·日 관계개선의 노력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1992년 1월 NPT 핵안전조치협정 서명, 그리고 이에 근거한 IAEA의 핵사찰 수용, IAEA의 특별사찰 요구 거부, NPT 탈퇴(1993.3)등의 수순으로 核政策⁶⁴⁾을 전개해옴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핵문제를 발판으로 對美 관계개선을 위한 입지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비록 핵문제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 해결(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전제로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약속⁶⁵⁾받음으로써 대미 기술·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문제를 수단으로 미·일관계개선을 추구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문제는 대미·일관계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핵카드를 절묘하게 잘 사용할 경우 대미·일관계개선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들의 체제특성에 맞게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통하여 국제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포

64) 북한 핵정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본연구의 제3장을 참조할 것.

65) 1993년 7월 19일 2단계 미·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이 IAEA 사찰협의를 수용하고, 남북회담의 조속한 재개 그리고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위한 미국의 지원 등에 합의했다.” 『世界日報』, 1993.7.28.

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협상을 위한 2단계 고위급회담 결과 미국이 보여온 대북한 유화적 태도나, 최근 일본이 그들의 정계개편 후 북한 핵의혹이 완전해소되지 않으면 협상재개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핵문제와 같은 조건없이 대북수교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⁶⁶⁾을 볼 때 이러한 북한의 대미일관계의 낙관론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2. 對南的 環境

가. 韓國의 北方外交와 國際的 位相 強化

한국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되어온 신국제질서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北方政策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한국은 1980년대말 이후 거의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잇달아 국교를 수립하였다.⁶⁷⁾ 특히 1990년대 들어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지원세력 국가인 구소련⁶⁸⁾ 및 중국과 차례로 국교를 정상화 함으로써 한국

66) 「中央日報」, 1993.8.30.

67)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 알바니아(91.8.22), 불가리아(90.3.23), 체코슬로바키아(90.3.22), 헝가리(89.2.1), 폴란드(89.11.1), 루마니아(90.3.30), 유고슬라비아(89.12.27). 民族統一研究院,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600.

68) 구소련 해체후 새로 독립한 대부분의 구소연방 국가들과도 국교

의 북방정책의 결실은 절정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국제적 역량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더욱이 한국과 러시아·중국을 정치·경제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상호군사협력 마저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후 급진전되어 엘친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초의 아시아 방문국으로서 한국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러 양국은 「한·러간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二重課稅 防止協定」, 「經濟共同 委員會 構成 規程」, 「文化協定」, 그리고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軍事交流 合意書」 등 6개의 조약 및 협정체결을 통해 양국협력 증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⁶⁹⁾ 특히 한·러 양국은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합의서」를 기반으로 군고위 장성 상호방문, 군사훈련 상호참관, 함정 및 비행단의 상호교환 등에 합의함으로써 기존 북한의 對러시아 군사관계의 친밀성이 약화 또는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정치·경제적 측면의 협력관계로 특징지워진다.⁷⁰⁾ 군사적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중국은 韓·中修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1992년 6월 楊白冰 인

를 수립하였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몰다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크, 투루크멘, 타지크스탄, 카르키스스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들과 1991~92년을 거치면서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69)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45.

70) 위의 책, pp. 43~46.

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을 방북토록 하여 군사협력관계의 지속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1992년 8월 외교부 대변인을 통하여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의 효력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한국전 참전에 대한 입장 불변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관계정상화는 결코 북·중간의 기존 동맹관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해 왔으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NPT조약의 普遍性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함으로써 NPT조약의 공정성을 거론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실정이다.⁷¹⁾ 또한 중국측의 한반도 정책담당 관계인사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빠지거나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자폭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지지 않으면 안될 것”⁷²⁾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중국은 북한의 안보유지에 대한 기존의 맹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7월 27일 휴전협정 40돌을 맞아 중국이 공식·비공식 대표 80여명을 평양에 파견함으로써 전통적인 朝·中 友好關係를 다진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

71) 「朝鮮日報」, 1993.3.14.

72) 「中央日報」, 1993.7.29.

73) 「人民日報」, 7월 29日字 평양발 보도에 의하면 방북한 중국 대표 단장인 胡錦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중국-북한간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국제질서에서의 편입을 심화시켜 나간다면 한국과의 관계는 보다 폭넓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 분명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유대에 기초한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변질 또는 약화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이와같은 제반 국제적 역량 증대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고립을 보다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김일성 유일지배정권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강화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됨으로써 이에 부응한 새롭고 구체적인 군사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韓國의 經濟力 強化에 따른 軍事力 增強 趨勢

한국은 1962년부터 수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 옴으로써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성장이 제1차 계획기간(1962~1966)에는 7.8%, 제2차계획기간(1967~1971)에는 9.6%, 제3차계획기간(1972~1976)에는 9.7%, 제4차계획기간(1977~1981)에는 5.8%, 제5차계획기간(1981~1986)에는 8.6%, 제6차계획기간(1987~1991)에는 10.0%를 각각 기록하였

우호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국공산당 및 정부가 확고하게 견지하고있는 불변의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김일성-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거론, 영도력에 찬사를 보냄으로써 중국이 金父子 世襲體制를 공식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朝鮮日報」, 1993.7.30.

는 바, 남한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그결과 남한은 국민총생산 규모에 있어 북한에 비해 1960년 1.3배, 1970년 2.0배, 1980년 4.5배, 1990년 10.3배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었다.⁷⁴⁾

특히 1986년 이후부터 1990년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남북한의 GNP 격차가 급속히 커지게 된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이 연 10% 수준에 달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동기간중 북한은 연평균 성장을 2~3%에 불과한 경제적 침체를 면치 못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⁷⁵⁾

이러한 남한의 경제력 성장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기반으로 1976년부터 단년도 군사비 총액에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는 1.4배, 그리고 1990년~1991년에 가서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였다.⁷⁶⁾ 이러한 남북한 국방비의 단년도 격차는 향후의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발전 투자비 규모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이후부터였으며 그 격차 또한 해를 거듭함에 따라 증가

74) 統一院, 「分斷 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1990); 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1990) 참조.

75) 물론 이러한 남북한 국민총생산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1986년 이후 한국의 對美換率이 급속하게 評價切上된 결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은 1986년에는 881.4(한국원/달러) 그리고 1989년에 가서는 671.4(한국원/달러)로 나타났다.

76) 國防部, 「國防白書」, p. 136. <도표 3-2-6> 참조.

추세를 보여 왔다. 1985년 현재 남북한 군사투자비의 비율은 0.9배에서 1990년에는 1.5배 그리고 향후 1995년 경에 가서는 약 1.8배의 한국 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군사비 중에서 전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자비 누계부문은 현재까지 한국이 북한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⁷⁷⁾ 「國防白書」에 의하면 현재상태의 전력증강 투자 추세가 계속될 경우 1990년대 중반에 가서는 투자비 누계부문에 있어서도 한국이 북한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북한 대비 투자비 누계부문의 추월시기가 좀 더 앞당겨 질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면에서 북한이 한국보다 유리한 상황을 누려온 것 중의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산권 무기가격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구입(예: MIG-29 2200만달러, F-16 3500만달러)함으로써 동일비용으로 한국보다는 다량의 무기획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⁷⁸⁾ 그러나 향후 북한은 군사장비 교역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원조적 차원의 성격이 배제됨으로써 더이상 이러한 가격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사업은 보다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반적인 불리한 여건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패배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77) 1991년 현재 투자비 누계는 한국/북한 80% 수준이다. 위의 책, p. 137.

78) 위의 책, p. 137.

3. 對內的 環境

가. 김정일 權力承繼上의 過度的 要求: 權力基盤 構築과 軍事力 增強

북한은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가 움직이는 체계” 즉 수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이루고 있다.⁷⁹⁾ 이러한 유일적 지도체제가 공고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에 노동당 내부의 김일성 정적들이 거의 대부분 제거됨으로써 북한의 이러한 유일적 지도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주체사상을 정식화함으로써⁸⁰⁾ 유일적 사상체계를 수

79) 김남식,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統一問題研究」, 제3권 1호 (1991 봄), p. 20.

80)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제창된 것은 1955년 12월 사상분야에서였으며 그후 경제에서의 자립(1956), 정치에서의 자주(1957), 국방에서의 자위(1962) 등으로 이어지면서 1967년 12월 6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 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규정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발전되었다.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전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88.

립함에 따라 북한은 수령론에 입각한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수령론을 통해서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가 합리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당과 수령 그리고 대중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일체적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현명한 수령이 없는 당은 진정으로 노동계급의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대중과 당은 오직 수령 즉 김일성에 종속될 때 주체성을 가지게 되며 역할과 삶에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는 수령의 임무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밝힘으로써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한다. 당이 노동계급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 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령도가 없이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비단 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혁명 발전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논다.⁸¹⁾

이에 더하여 북한은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체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권력승계 작업을 벌여옴으로써 일인독재체제의 영속화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은 김정일어로의 권력승계에 대한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⁸²⁾

81)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324.

첫째, 노동자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원인, 의식, 승리는 위대한 지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전적으로 지도자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의 권위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둘째, 위대한 지도자의 혁명목표 달성은 한세대에서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업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후계자는 김일성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김일성이 세워놓은 주체혈통을 이어받은 자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령의 사상을 순결히 옹호·고수하여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끝까지 대를 이어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정권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한 이러한 논리적 배경하에서 북한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작업을 일찍부터 시행해왔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김정일의 지도권의 범위를 선전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그리고 군사부문으로 확대시켜나갔다.⁸²⁾ 먼저 김정일은 항일투쟁의 업적을 중심으로한 김일성의 신격화에 앞장섰는가 하면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중심테마로한 이데올로

82) 이상민, “北韓의 政治構造와 權力世襲,” 大陸研究所, 「北韓研究」 (1991 가을), pp.16~17.

83)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北韓의 實相과 展望-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서울: 동화연구소, 1991), p. 55.

기 부문에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근간으로 하여 보도를 포함한 선전부문을 완전 장악해 나갔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김정일의 영향력은 유기적인 형태로 짜여진 확고한 지도권으로써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력을 뒷받침 해주는 최대의 지주는 조직적 측면에 있어서의 3대혁명 소조 및 이에 대한 당의 지도기구, 그리고 동태적 측면에 있어서의 ‘속도전’, ‘70일간 운동’,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에 대한 지도 등이다. 군사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지도권 역시 확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김정일은 군에 대한 지도권의 확립을 위하여 일찍부터 장악해 왔던 당의 조직·선전 부문 및 문화예술 부문을 최대한 이용해 왔으며 군대내의 정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동시에 김정일은 ‘항일혁명전통’을 강조함으로써 오진우를 비롯한 항일투쟁 참가자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어 자신의 군사적 지도권을 확장해 나갔다. 그결과 김정일은 1980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990년 5월의 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이듬해 12월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곧이어 북한정권은 1992년 4월 국방의 통수권을 주석의 권한과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단행함으로써 김정일의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 공식 추대에 대한 법적장치를 완료하여 내용적으로나 제도적으로도 명실상부하게 김정일의 군사부문에서의 공식 권력승계를 사실상 마무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의 성공여부는 김정일의 지도력에 의한 새로운 가시적인 성취업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정일은 군사부문에서 탁월한 영장, 위대한 전략가로 통칭되어오던 김일성의 후광하에 제2인자의 지위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이제부터는 군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확립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선전활동을 통해서 인민군의 충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군사적 카리스마를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인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기존에 고수해오던 공세적 군사태세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 유지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북한의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일의 새로운 군사적 지도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정권의 원천은 혁명 군사적 정통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김정일은 군사적 정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일성 군통수권하에서 지탱되었던 강력한 군사적 권위와 강대성 유지를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대외적 안보협력관계가 약화 또는 변질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사정 또한 최악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강화를 위한 다른 합리적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 國防優先政策과 經濟的 限界의 相衝性 深化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일찍부터 여러 차원의 복합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군사력 증강을 기본으로 하는 국방우선정책을 펴왔다. 실제로 북한은 196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經濟·軍事並進 政策이라는 구호 아래 경제성장 또는 규모에 비해 과도하리 만 큼의 군비를 지출하여 옴으로써 군사력 우위를 위한 노력을 지속 해왔다. 북한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에 있어서는 30% 이상을, 그이후 부터는 10%를 상회 하는 군사비 대 총예산의 비율⁸⁴⁾을 보이고 있다. 북한 통계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군사비/총예산 비 율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의지 또는 필요성을 충 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권 력승계체제의 마무리 단계에 처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 부문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북한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의 의지 또는 필요성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북한의 국방우선 정책은 심 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의 증강에는 군사 력의 조직 관리, 운영의 효율화 외에도 자원의 투입이 전제된다. 특히 오늘날 군사력 증강에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

84) 이규열, “北韓의 軍事費 및 軍事力에 관한 分析,” 서진영 편, 「現 代中國과 北韓 40年」(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pp. 206~07.

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정립, 화력 및 기동력의 증가 등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력 증강에 있어서 많은 限界性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경제는 1990년 이후 연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왔다. 특히 1992년중 북한경제는 대외무역규모가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한데다 북한 에너지 공급의 대종을 이루는 석탄생산이 감소(-5.8%)하고 외화부족으로 원유 도입량(-19.6%)도 줄어드는 등 에너지 공급난(발전량: -6.1%)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원자재의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여타산업의 생산활동도 부진하여 연중 -7.6% 성장을 기록하였다. 달러로 평가한 1992년 북한의 경상 GNP는 전년보다 7.9% 감소한 21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1인당 GNP도 1991년 보다 95달러가 줄어든 943달러를 기록하였다. 북한의 대외거래 또한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92년에도 이와같은 대외거래 위축현상은 지속되어 1991년 대비 2.2% 감소한 26억 6천만 달러에 머물른 것으로 밝혀졌다.⁸⁵⁾

물론 이제까지 북한은 체제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열세한 경제력 및 국가예산을 갖고도 국방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단순히 외형적인 경제력 규모나 국가예산규모만을 가지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노력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

85) 한국은행, 「1992년 북한 GNP추정결과」 (1993.6) 참조.

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북한경제는 쉽사리 회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추구할 수 없음을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정책적 선택의 관건은 대외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나 내부체제의 공고화 목적을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투자를 일단 어느 정도까지 증강시킬 것이며 동시에 경제성장 노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배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사력 증강이나 경제성장 노력은 모두 政權安保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 바, 북한은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향후의 군사력 증강의 방향은 북한 경제성장의 희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은 현재 보다 경제적⁸⁶⁾이면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軍事的 代案으로서 核武器와 같은 대량살상

86) 핵병기개발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오히려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첨단장비들은 통상병기이든 핵병기이든 그 값이 상승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은 핵병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핵전력 개발에 투자된 비용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국가의 전반적인 국민경제와 경제활동 분야에 파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핵전력개발의 利點이 提高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 부터 시행·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의 북한핵 개발비용은 큰부담이 될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무기 개발을 한층더 심화시켜 그 타개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

4. 小結論: 김일성 政權의 不變과 軍備增強政策 意志 固守

북한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그들의 체제 또는 정권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우선 국제적인 상황변화는 북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되어 왔다. 구소련의 붕괴를 포함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새로이 형성된 신국제질서의 구도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으로도 중국 및 구소련과의 동맹관계가 약화 또는 변질되어감으로써 북한의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한은 이러한 안보상황의 변화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⁸⁷⁾으로 규정함으로써 정권안보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외부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는데 그 내용은 외부로부터의 단절 및 폐쇄전략으로 집약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

87)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나아가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당의 노선과 방침은 우리식 대로 살아가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우리식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이란 다름아닌 우리당의 노선과 방침대로 사고하는 것이다. 우리당의 노선과 정책과 어긋나는 그 어떤 사상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온 사회에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 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⁸⁸⁾고 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인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 동구, 구소련에서의 개혁과 무관하게 북한은 더욱 우리식 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수하고, 이들 사회주의권의 개혁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사상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됨을 강조하는 것이다.⁸⁹⁾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권의 붕

88)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9.2.

89) 북한에 인민정권이 수립된 이후 김일성 정권은 크게 보아 2차례에 걸쳐 심각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19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이고 또다른 하나는 1990년 초를 전후하여 구소련 붕괴로 야기된 세계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몰락이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은 사상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주의권에서 크게 변저온 변화의 물결을 차단하기 위해 맹목적인 사회주의 연대를 단절하고 자주노선 선택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군사적으로로 ‘국방자위’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군비증강노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괴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의 우월성을 발양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김일성정권을 더욱 강화하는 기초위에서 사상·기술·문화의 대혁명을 부추겨 나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북한정권 내부의 權力移讓期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상황요인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유연대응태도 보다는 폐쇄적이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권력세습 작업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父子世襲에 대한 북한내부로부터 이데올로기적 불만과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 당과 관료, 군부 및 일반 주민들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김정일에게로 轉移하는데 대한 난관 등이 북한세습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金父子世襲體制의 정통성과 강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위협을 보다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적이고도 폐쇄적인 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대외적 고립과 내부적인 경제난에 직면하여 전례없이 유화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美·日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는가 하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서명 등은 이러한 북한의 宥和的 態度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한 북한 당국의 대외적 태도를 주시하여 보면 북한은 기존의 기본노선에 있어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징후를 보임이 없이 오히려 내

부적으로 그와 상반되는 정책을 강화해 온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다. 북한이 남북합의서 서명 이후 수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 온 것 또한 그것의 이행을 통하여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미·일 관계개선 카드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 목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⁹⁰⁾ 또한 북한의 미·일관계개선의 카드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어느정도 봉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韓·美 同盟關係를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美·日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김일성 정권유지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문제와 같은 기본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해나갈 수도 없을 것이므로 북한은 경제문제 타개에 필요한 원조 등 국제적 협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美·日과의 관계개선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美·日 관계개선 노력은 본격적인 북한의 대외적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는 정책적 전환을 의미하기 보다는 제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정일이 권력승계과정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고 자신의 권

90) 유영옥, “北韓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化展望,”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 (1992 가을), p. 29.

력기반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현재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희생을 위해서 북한은 실질적인 경제개혁·개방조치를 표방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외 또는 차단으로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상 그들의 개혁·개방정책의 시행이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북한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는 있다. 특히 1990년대 초에 북한은 대외개방 관련 정책을 보다 제도화시켜 놓았다. 북한은 199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外國企業의 權利와 利益保護 규정을 삽입하였다. 나아가 북한당국은 1992년 말에 가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제정하였으며, 1993년 2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외환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 세가지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의 강한 의욕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북한은 현재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민간부문에 재분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 체제안보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대안은 경제희생을 통한 정권안보 확보 이전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만세력을 자극시켜 김일성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보다 강하게 작용할 가능

성이 크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권안보 측면에 있어서 북한 당국은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한 정권유지정책을 적극화 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정권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주체사상의 강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결속작업과 체제선전을 통한 현정권 유지를 꾀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도 비록 대남 모험주의와 같은 強硬路線을 당분간 지양할 것이지만 金父子 權力承繼體制 維持에 필수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 중심의 군비증강정책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북한은 자체 경제능력의 저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소모적인 군비증강정책은 피하되 기존에 개발해오던 핵무기를 포함한 공격형 무기체계 즉 기습공격 및 대량살상무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군비통제회담과 같은 일련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는 명목상의 협상창구를 개설하는 등 이중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무기개발 지속정책의 필요성이 한층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전환기의 군사정책 대안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第 V 章 北韓의 軍事政策 代案으로서의 核政策

현재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정권안보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추구해오던 군사력 증강정책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북한경제는 이를 오히려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총체적인 군사적 억제기능 측면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개발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제고되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정책을 대안적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정책을 어떠한 動因에서 출발하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핵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핵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전환기의 대안적인 군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核擴散 理論과 北韓의 核開發 誘引要因

가. 核擴散 理論

1974년 5월 18일 인도가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미국,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 핵국가로 되었다.⁹¹⁾ 그리

고 이스라엘,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등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스라엘, 파키스탄 등)이 핵무장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핵기술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북한도 여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핵전문가들은 이러한 핵확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핵확산은 결국은 막을수 없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그 확산속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고 또 어느 나라가 먼저 다음번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것이 문제될 뿐이다. 도미노이론은 공산화되는 경우 보다는 핵확산의 경우에 더 잘 적용되어 핵국가의 수가 지금 보다 조금만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 핵확산 현상은 매우 가속화될 것이다.⁹²⁾

수많은 학자들은 세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이 앞다투어 핵무장읍션을 취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것을 취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핵확산의 技術學派(Technical School)와 動機學派(Motivational School)⁹³⁾의 두

91) 인도의 경우 다른 핵보유국과는 달리 한번의 핵폭실험만으로 핵국가가 된 소위 ‘一發原爆’ 국가의 특별한 사례가 되었다. 이호재, 「核의 世界와 韓國 核政策-國際政治에 있어서의 核의 役割」(서울: 法文社, 1987), p. 79.

92) 國土統一院, 「核武器와 弱小國의 外交的 地位 -東北亞 國際秩序, 核武器, 그리고 韓國」(1977), p. 11.

93) ‘技術’(Technical)이라든가 ‘動機’(Motivational) 등의 용어는 S. M. Meyer가 사용한 것이다. Stephen M. Meter, *Dynamics of Nuclear*

가지 부류로 대별된다.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밝혀진 핵읍선 요인들은 기술, 경제력, 평화용과 군사용 핵기술의 불구분성, 국가안보, 잠재적 敵의 억지, 국가적 활성력 그리고 정치적·군사적 독립 및 국가권위의 示威, 국방비 삭감, 세계정치에 있어서의 세력지위 획득, 협상력 提高, 국내적 위기, 국내적 指導力 및 정통화 등으로 요약된다.

技術學派에 의하면 일국이 핵무장에 나아가게 되는 動力은 일정 수준의 핵관련 기술적 노우하우(Know-how)의 발전과 경제적 능력이라는 것이다.⁹⁴⁾ 다시 말하면 기술적 수단을 획득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그기술을 핵무장을 위해서 사용하며 만약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면 마치 전염병과 같이 핵무기 개발기술은 국가에서 국가

Proliferat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참조.

- 94) 1950~60년대의 많은 학자들이 技術的 측면의 핵확산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70 without Arms Control* (Washington D. C.: NPA, 1958); Hedly Bull,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New York: Praeger, 1961); Leonard Beaton and John Madox,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 York: Praeger, 1962); William R. Van Cleave, "Nuclear Proliferation: Th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Technology" (Ph. D. dissertation at Claremont Graduate School, 1967); Walter B. Wentz, *Nuclear Proliferation*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68); C. F. Barnaby, "The development of Nuclear Energy Programs," in C. F. Barnaby, ed., *Preven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London: Souvnr, 1969), pp. 16~35; L. Beaton, *Must the Bomb Spread* (Baltimore: Penguin Books, 1966)
참조.

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기술학과 학자들은 제3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무장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이와는 달리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간적 차이를 두면서 모두 핵무장을 하게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핵무장을 원하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핵무장을 위한 정치적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완전히 간과해 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캐나다나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核武裝을 하고 있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技術學派의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핵확산의 요인으로서 기술적 능력이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모든 국가가 반드시 핵무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핵무장의 결정은 기술적 요인 이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포터(William. C. Potter)와 같은 학자는 前述한 선진국들이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노우하우 보다는 정치적 의지의 여부에 보다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⁹⁵⁾

결국 技術學派는 지나친 이론적 단순화와 많은 결점을 노정시킴으로써 水平的 核擴散에 대한 모든 중요한 측면을 규명하기에 충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95) William C. Potter,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Cambridge: Oeleschlager, 1982), p. 3.

기술 뿐만 아니라 핵분열 물질 등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기술학파의 이론적 효용성은 보다 떨어지게 되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언제 어느 때를 불문하고 원하기만 하면 핵무장화를 가능케하는 핵잠재능력을 갖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기술학파의 이론적 적용이 단지 아직까지 핵기술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몇몇 약소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1970년대 이래의 動機學派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動機學派에 있어서 기술적 수단의 유용성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향후의 핵확산은 정치적인 것이든 군사안보적인 것이든 국가들의 핵옵션을 부추기게 되는 動機들에 크게 의존될 것이라 한다.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핵기술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핵기술 유무는 핵무장 옵션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적 가치를 상실할 것이며 오히려 국가들이 핵무장의 직접적 동기 여하에 따라 핵무장 옵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일본 및 많은 서방 선진국가들이 핵기술 능력보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핵무장 옵션을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동기적 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국가들의 핵무장 옵션에 대한 동기요인 분석을 근간으로한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이들 학자들이 밝힌 핵무장 동기 요인들은 技術 및 經濟的 능력 등의 핵확산을 위한 국가적 필수조건과, 정치적 위신, 自治, 협상지위 제고, 국내

정치, 경제적 파급, 안보상의 抑止, 교전상의 利點, 위협, 기술적 餘勢 등의 誘引要因 그리고 공공여론, 관료정치, 외부에 의한 정치적 제재, 평화 이미지에 대한 손상, 국제규범, 외부에 의한 군사적 반응, 동맹체제 약화 및 경제적 비용 등의 抑制要因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국제적 위기, 안보협력체제 약화, 핵기술 또는 핵물질의 획득 가능성 증가 또는 감소,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국내적 위기 또는 지도권의 변동 등의 상황 변화 역시 핵확산의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핵확산 동기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어느 국가도 완전히 동일한 핵무장 옵션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도 하다. 각 국가들의 독특한 특성이 핵무장 동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의 핵옵션의 일차적 동기는 넓은 의미에서 抑止, 交戰上의 이득, 그리고 국제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⁹⁶⁾ 북한의 핵개발 동기 역시 다양한 요인을 갖추고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3가지의 誘引要因 범주내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6) Ibid., p. 178.

나.北韓의 核開發 誘引要因

일반적으로 軍事的 安保와 관련하여 非核武裝 국가들은 핵공격, 재래식 군사력 공격 또는 주변 적대국의 핵무장 등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옵션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⁹⁷⁾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역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또는 정권안보(regime security)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일반화 되어왔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남한에 배치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전술핵 그리고 경제 및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韓·美 군사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군사력을 억지하기 위하여 재래식 무기 증강에 더하여 핵무기를 개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핵사용 위협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은 휴전 이후 핵무기체계에 의한 대량보복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잔류하게된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은 핵무기로 장비를 갖춘 5개 전투단으로 편성된 펜토믹(Pentomic)사단으로 개편되고 1958년 1

97) George Quester, *Th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p. 6~7; 이외에 핵개발 動因으로서 군사안보를 위한 抑止要因을 지적한 학자는 다음과 같다. Beaton & Maddox(1962), Rosecrance(1962), Barnaby(1969), Willrich & Taylor(1974), Dunn & Overholt(1976), Greenwood(1977), Kapur(1978), Lefever(1979), Betts(1980), Dunn(1982), Potter(1982), Meyer(1984), Reiss(1988).

월에는 재래식 포탄이나 전술핵 탄두를 다같이 발사할 수 있는 280mm 원자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네스트 존을 보유하게 되었다.⁹⁸⁾ 물론 이러한 한반도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억지 그리고 다음으로 방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선제공격이 없는 한 그것의 사용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껴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조선에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이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⁹⁹⁾ 고 밝힘으로써 주한미군의 핵위협을 경고하고 있다.¹⁰⁰⁾

또한 韓·美相互條約을 토대로 한 미국의 지속적인 대남한 군사 지원 및 경제의 발전에 부응한 남한의 군사력 증강추세 등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6월 26일 워싱턴 포스트紙 기자와의 회견에서 한국은 만약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후퇴하면 생존을 위하

98) 하영선, 「韓半島의 核武器와 世界秩序」 (서울: 나남, 1991), p. 213.

99) 「로동신문」, 1986.6.24.

100) 주한미군의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남조선에는 핵폭탄을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의 밀도는 나토성원국들에 전개된 핵무기의 밀도보다 4배나 높습니다. …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각종 핵무기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핵전쟁연습고동을 빈번히 벌리고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429.

여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물론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미국의 적극적인 저지노력¹⁰¹⁾으로 무산되었지만 피터 헤이즈 박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이 “보유한 핵기술 능력으로 볼 때 한국은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업적 기반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¹⁰²⁾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연결되어 주한미군의 핵무장과 더불어 평양정권의 핵무장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서 이와같은 군사적 안보 요인 이외에도 정치적 요인(국내외적인 정치적 지위 또는 위신)이 크게 작용하여 왔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¹⁰³⁾ 김일성 정권은 정부수립 이후 그의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무력적 방법으로 남한을 침략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적화통일의 당위성과 제국주의(특히 미국)의 위협을 과장, 이에 대한 대비책

101) 예를 들면 미국은 1976년 6월 프랑스의 플루토늄 재가공 기술과 공장(플루토늄 분리공장이라고도 함)에 대한 한국의 구매교섭이 핵폭탄 제조 용도라 하여 이의 취소를 위해 강력히 압력을 가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이호재, 「核의 世界와 韓國核政策」, p. 216.

102) 「시사저널」, 1992.8.13.

103) 핵개발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을 지적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Beaton & Maddox(1962), Rosecrance(1964), Quester(1973), Willrich & Taylor(1974), Jensen(1974), Dunn & Kahn(1976), Dunn & Overholt(1976), Greenwood(1977), Kapur(1978), Betts(1980), Lefever(1979), Dunn(1982), Potter(1982), Meyer(1984), Reiss(1988).

으로서의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인민을 洗腦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결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대남무력적 화통일 당연성의 강조를 통하여 군비증강을 정당화 해왔으며 이는 곧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세습되는 유일지배체제의 강화 및 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인 하나로 기능해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은 그의 유일독재권력의 정통성을 주체사상에서 찾고자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 정권은 주체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주체의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열망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를 실제적으로 담보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군사적 표현이 바로 군비증강을 위한 핵무기 개발의지임에 틀림없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입장은 한반도에 있어서 核武器 無用論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실제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난다해도 미제국주의자들이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아가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며 돌아가겠는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적들이 핵무기를 쓰면 자기편도 죽습니다”¹⁰⁴⁾ 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핵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한두개의 핵무기로 수천개 수만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하기는 어렵다”¹⁰⁵⁾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核武器 無用論은 내면적으로 핵개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104)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68.

105) *The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사용상의 목적 보다 군사적 억지기능에 더하여 정치적 목적을 많이 수반하게 되는 핵정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1964년 10월 중국의 핵실험 성공과 관련하여 북한은 “두차례에 걸친 원자폭탄의 성과적인 폭발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공업 및 과학 기술이 새로운 발전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새 전쟁도발 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¹⁰⁶⁾이라고 밝히고 社會主義 強國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핵무기 개발능력을 포함한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은 ‘작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왔을 것이다. 사실상 핵무기는 그 자체로서 강대국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기반으로 한 ‘작은’사회주의 강국 정책추구를 통하여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위신을 증대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지배정권 안보의 공고화를 추구해온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로서 ‘작은’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하게 된다면 대외적으로 실질적인 정치적 威信(political prestige)과 協商地位(bargaining position) 및 自治(autonomy)를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國內 政治的 次元의 安定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전과 많은 군사적 ·

106) 「로동신문」, 1965.10.26.

경제적 원조에 의한 중국 및 구소련의 직·간접적인 간섭에 직면해 온 상황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편으로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지나친 군사적 의존성에 대한 탈피로 이들 양사회주의 강대국들로부터의 자주적 노선 또는 자치의 여지를 넓혀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그리고 남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대남혁명전략 달성에 유리한 협상지위의 提高를 가능케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얻게될 대내외적 영향력은 김일성 자신의 정통성을 고양시켜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승계자인 김정일 지도권하의 政權生存을 담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의 핵개발 동인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당국의 핵개발 의지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부응한 추진력 또한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 실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관련한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北韓의 核開發 能力 評價

일반적으로 핵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과 시설을 필요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라늄 농축 그리고 재처리 기술 및 시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핵무기를 자체개발하기 위한 핵분열 물질 확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플루토늄은 용매추출법이나 불화물 휘발법 등의 재처리 기술에 의

하여, 그리고 우라늄은 가스확산법, 원심분리법, 노즐분리법 및 레이저 분리법 등의 농축기술에 의하여 생산이 가능하다.¹⁰⁷⁾ 그런데 이제까지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농축에 필수적인 시설¹⁰⁸⁾을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재처리시설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농축시설이 아니라 재처리시설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의 核威脅 實體에 대한 평가는 재처리 시설을 이용한 플루토늄 개발에 필요한 핵시설과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핵연료 공급 상

107) Ted Greenwood, George E. Rathjens and Jack Ruina, "Nuclear Power and Weapons Proliferation," *Adelphi Paper*, No. 130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6), p. 9.

108) 감속재로 중수나 흑연을 사용하는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그외 대부분의 원자로는 농축된 우라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축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시설의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비용 때문에 핵기술이 발달한 몇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농축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여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역시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원자로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구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사저널」, 1991.5.31, p. 46; 그런데 한국의 핵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이 농축시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징후로 보아 그 존재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험실 규모의 농축시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의 特性과 제원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재처리 기술의 현황과 관련 기술들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가. 核燃料 供給

김일성이 “원자력 연구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직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핵연료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을 공업적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¹⁰⁹⁾고 밝힌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천연 핵연료에 대한 충분한 공급사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64년 중국이 5번째의 핵보유 국가로 선포되었을 때 북한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및 캐나다의 우라늄 매장량보다 많은 400만톤 가량의 우라늄 매장량을 함흥, 옹기, 해금강에서 발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¹¹⁰⁾ 물론 북한이 발굴했다고 발표한 우라늄 매장량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자체 원자력 산업발전에 필요한 상당한 양의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최근 북한은 황해도 평산과 평북 박천 부근 등 두곳에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

109)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213~15.

110) Leonard S. Spector,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p. 121.

다고 IAEA에 보고한 바 있다.¹¹¹⁾

이들 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을 현지에서 精練하여 불순물과 우라늄을 분리해 낸다음 약 70% 내지 80%의 酸化 우라늄(U3O8)을 함유하고 있는 精選鑛(Yellow Cake)을 생산해낸다. 특히 평산 광산에서는 22개의 생산단위 공장, 4개의 선광시설, 600m의 광석운반 콘베이어 등으로 채광하여 원광을 인접지역인 평화리 정련공장에서 정련을 하게 된다. 정광은 구성과 영변에 소재한 우라늄 가공 공장에서 핵연료로 가공되나 이 공장의 처리능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현재까지의 채광실적과 핵연료 가공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운용중인 제2원자로¹¹²⁾에 소요되는 핵연료의 공급에는 큰 애로가 없으며 장차 완공될 제3원자로를 위한 핵연료도 충분히 자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原子爐 施設

재처리 기술 및 시설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원자로가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4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 제 1, 2, 3 원자로가 모두 영변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제4원자로에 해당하는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로서 함남 신포

111) 「東亞日報」, 1992.5.6.

112) 북한은 제2원자로에 소요되는 핵연료를 천연우라늄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京鄕新聞」, 1989.7.5.

〈도표 2〉 北韓 原子爐의 성능 및 제원

구분	원자로	제1원자로	제2원자로	제3원자로	발전용원자로
	일	소재지	영변	영변	영변
반	완공년도	1965 완공	1987.10가동	1995완공예정	도입계약1985
사	개발/기술 지원	소련	자체건설	자체건설	소련
제 원 및 특 성	원자로명	IRT-DPRK	Calder Hall	G-2	VVER-440x4
	용도	연구용	Pu생산용	Pu생산용	상업용
	열출력	정상 4MWt 최대 8MWt	최대 30MWt	50-200MWt	열 1375MWt 전기 440MWe
	핵연료	농축우라늄 10-20%	천연우라늄 0.7%	천연우라늄 0.7%	농축우라늄 3.5%
	감속재	중류수	흑연	흑연	경수
	냉각재	중류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경수
비고	· IAEA사찰 기록 · 88.5, 89.6	· 핵연료 국내 생산	· 좌동 · 프랑스 핵무기 개발시 사용	· 안전조치 서명 조건으로 건설	

출처: 金民奭,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北韓研究」, 제3권 22호 (1992 여름), p. 31.

주: 제3원자로는 G-2형 원자로의 제원임.

에 소개하고 있다.

제1원자로(KP-0001 연구용 원자로)는 舊蘇聯에서 도입되어 1965년 6월 30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 원자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연료(20~80%)의 농축 우라늄은 구소련에서 수입되었으며 사용된 핵연료는 소련으로 전량 회수된다. 정상출력 4MW, 최대출력이 8MW인 이 원자로는 순수한 연구용 원자로이며 「조·소 쌍무협정」에 근거 1992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친 IAEA사찰을 수감한

바 있다. 북한은 제1원자로를 원자력 연구에 주로 이용하였을 것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핵물리학, 원자로 물리학, 원자로 기술, 핵전자 공학, 핵 재료학, 방사선 의학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³⁾ 이와 같이 북한은 이 원자로에 대해서 기술지원, 핵연료 공급, 관련시설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IAEA 안전조치협정에 준하여 사찰을 받으면서 연구용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가장 밀접한 것은 제2원자로와 제3원자로이나 後者는 아직 건설중¹¹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북한 핵개발용 플루토늄 생산의혹을 가진 것은 제2원자로라고 할 수 있다.

천연금속 우라늄을 핵연료로 하고 흑연 감속재를 사용한 가스냉각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제2원자로는 북한 자체의 기술로 1980년대 초에 건설되어 1986년 가을에 가동되었다.¹¹⁵⁾ 이 원자로는 당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개발된 원자로로서 기술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건설하기 쉬운 모형이다.¹¹⁶⁾ 북

113) 金民奭,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北韓研究』, 제3권 22호 (1992 여름), p. 29.

114) 제3원자로는 1986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아직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1995년 즈음 완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동원자로는 열 출력 200MWt의 초대형 연구용 원자로로 알려져 있다. “Nuclear Jitter,” *Newsweek*, Apr. 29, 1991, p. 8. 동원자로는 프랑스의 가스로(G-2형)의 개선설계를 참조하고 있으며 최대출력으로 가동시 플루토늄을 연간 50kg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115) 『朝鮮日報』, 1992.4.17.

116) 정근모 교수의 『北韓 核問題의 現況과 展望』이라는 제하의 핵관

한이 제 2원자로의 냉각재를 탄산가스(Co₂)라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할 때 동원자로는 영국의 칼더 홀(Calder Hall)형과 그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¹¹⁷⁾ 정근모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가스爐는 천연우라늄 핵연료에서 상대적으로 Pu-239 동위원소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후진국 핵개발에 적합한 爐型”¹¹⁸⁾이라 한다. 실제로 북한은 가스爐를 통해서 첫째, 북한내에 매장된 우라늄 원광을 채광하여 핵연료로 제조할 수 있으므로 중국 또는 소련으로부터 핵연료 도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둘째, 원광을 사용할 경우 핵사찰시 사찰관에 의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핵연료를 은폐시킬 수 있으며 셋째,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¹¹⁹⁾에 유리한 것 등의 利點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¹²⁰⁾ 제2원자로는 IAEA에 보고(1987)는 되어 있으나 사찰을 받은 적은 없으며 공식적으로는 전기출력이 5MWt라고 밝혀져 있다. 전기출력이 5MWt인 것을 열출력으로 환산하면 16.5MWt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제2원

런 배포자료 참조.

117) 김민석,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p. 30.

118) 정근모, 「北韓의 核問題 現況과 展望」 참조.

119) 핵연료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반면 우라늄 238은 우라늄 235가 분열할 때 나오는 중성자를 흡수 핵무기 원료로 쓸 수 있는 플루토늄 239로 변환된다. 이 플루토늄 239중 분열성 플루토늄이 95% 이상이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후연감속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239는 분열성 플루토늄 비율이 95% 이상으로 핵무기 제조에 쓸 수 있다. 「京鄉新聞」, 1993.7.21.

120) 김민석,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p. 30.

자로는 최대출력을 30MWt 까지 낼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출력을 줄여서 발표한 것은 사용후 핵연료 양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짐작된다. 30MWt 열출력으로 가정할 경우 11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나 초기의 운전수준을 감안하면 약 6kg 정도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¹²¹⁾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고 플루토늄을 생산, 추출할 수 있는 총체적인 핵주기 시설들을 개발 보유하고 왔다는 것이 입증되며 이는 핵무기 제조로도 직접 연결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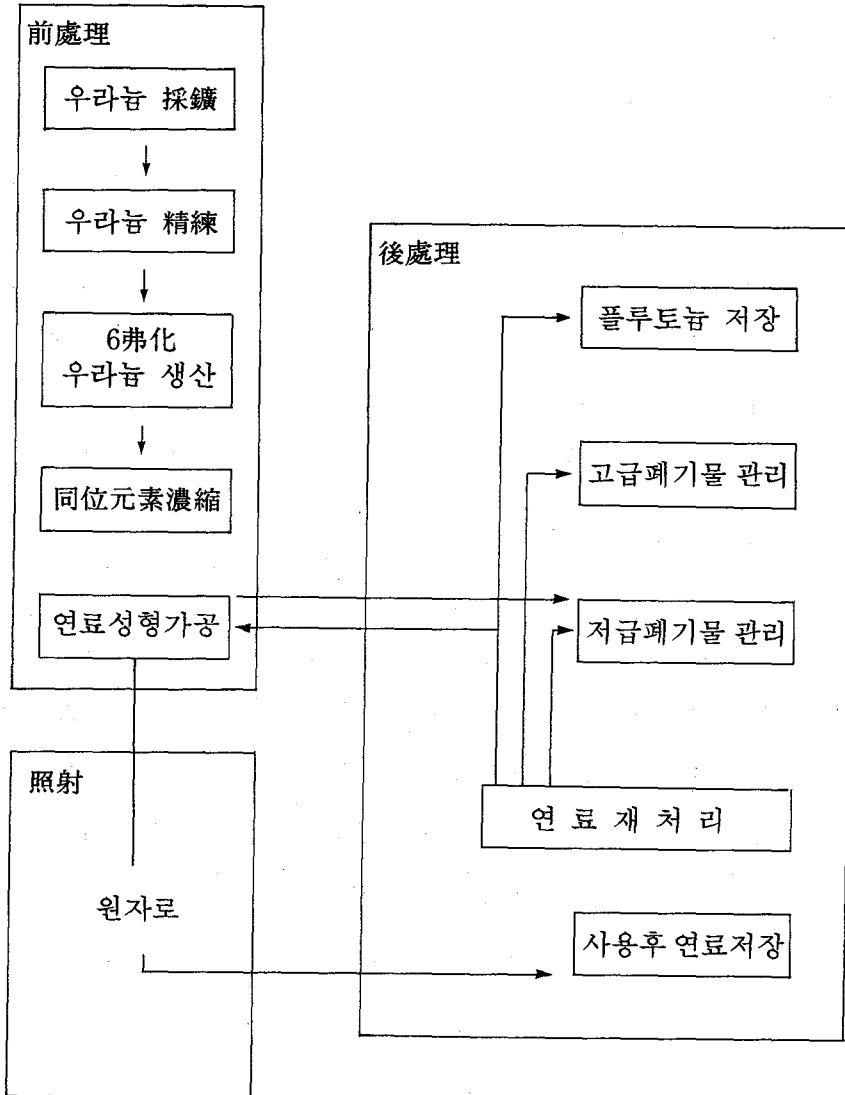
다. 再處理 施設

核擴散 防止라는 측면에서 볼 때 再處理는 연료 사이클의 단계 중 가장 우려되는 단계로 알려지고 있다.¹²²⁾ 재처리 단계에서 핵무기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이 정상 작업중 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플루토늄이 재처리 공장에서 일단 분리되면

121) 위의 글.

122) 핵연료 물질이 자원생산(採鑛, 精練, 轉換)에서부터 연료회수, 폐기물관리, 폐기물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적인 전과정을 일컫어 전체적인 핵연료 사이클이라 일컫는다. 이 중에서 최초의 다섯가지 단계 즉 채광, 정련, 전환, 농축, 핵연료성형가공을 통틀어 연료사이클의 前處理(front-end)단계라 한다. 그리고 원자로내에서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단계를 照射(irradiation)라고 하며 나머지 제단계 즉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재처리, 폐기물처리 등을 핵연료 사이클의 後處理(back-end)라고 한다.

〈도표 3〉 핵연료사이클의 基本 要素



출처: John E. Gray et al.,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reeder Reactors* (New York: The Rockefeller Foundation, 1978), pp. 1~8.

이후의 연료 사이클 단계에서 도난, 오용, 유용 등에 취약하게 된다. 북한의 재처리 시설이 현재 가장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¹²³⁾

북한은 IAEA에 제출한 14개 핵시설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사찰단의 방문을 뒤늦게 허용한 영변 방사능 화학연구소에서 건설중에 있는 방사능 화학실험실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시설을 통해서 재처리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건설중에 있는 이 시설을 부분 가동하여 플루토늄(Pu) 추출 공정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시인하였다.¹²⁴⁾ 그런데 북한이 방사능화학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대형시설로서 길이 180m, 폭 20m, 5층 정도의 높이에 축구장 2개 규모의 넓이를 갖춘 플루토늄 생산시설임에 분명하다. 한국의 핵관련 전문가들의 의견¹²⁵⁾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를 외국의 재처리 공장과 비교해 볼 때, 영변의 재처리 시설은 연간 약 200~30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완공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시설로 추정된다고 한다.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역시 방사능화학실험실이 완공되면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이러한 공장건

123)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核擴散과 核擴散 禁止政策」(서울: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1983), p. 86.

124) “북한핵시설의 3대 수수께끼,” 「月刊朝鮮」(1992.8) 참조.

125) 한국의 핵관련 전문가들과의 비공식 인터뷰에 의한 판단임.

126) 「東亞日報」, 1992.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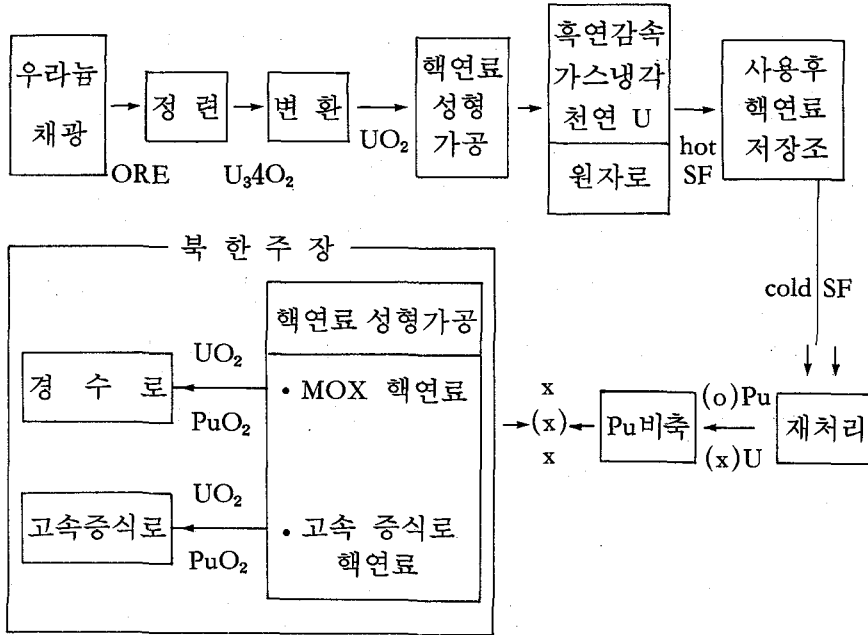
설을 고속증식로¹²⁷⁾의 개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의 고속증식로가 실용화 되려면 선진국에서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핵발전 산업이 아직까지 원시단계 상태에 있는 북한이 고속증식로 개발 때문에 플루토늄 생산공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¹²⁸⁾

결국 북한이 이러한 재처리 시설을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낼 경우 핵무기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核擴散防止代案體系評價計劃(NASAP)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수송된 이미 분리된 플루토늄을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훈련되고 경험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수십개의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은 수백만달러의 경비만 들이면 몇개월내에 완성

127) 고속증식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는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고속증식로에서는 연소후에 최초 장전한 양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생성된다. 우라늄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 고속증식로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차세대 전력원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고속증식로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기술을 필요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속증식로 역시 핵탄원료인 플루토늄의 대량비축 및 생산을 정당화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벗을 수 없다.

128) 정근모, 「北韓의 核武器 現況과 展望」 참조.

〈도표 4〉 비순환핵주기(Once-through Nuclear Fuel Cycle)운동



할 수 있으며 탐지되지 않게 해낼 수 있다. 단지 한개 또는 두개의 핵무기만이 필요하다면, 또는 산화물이 직접 사용된다면 더 적은 시간과 경비를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다. 플루토늄이 처음 획득되는 시간부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물질을 생산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數日 또는 數週면 가능하다”고 한다.¹²⁹⁾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지가 분명하고 강렬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

129)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核擴散과 核擴散 禁止政策」, pp. 97~98.

우 앞에서 설명한 재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지하화한 재처리시설을 통해서도 핵무기 개발용 플루토늄을 추출해 내었을 가능성 조차도 배제할 수 없다.¹³⁰⁾ 특히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사능화학실험실에서 플루토늄 추출공정시험에 성공하였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 재처리 기술축적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경우 외부의 도움없이 1년이내에 1000만달러 정도의 비중이면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핵무기 제조 목적을 위한 소규모 재처리시설 건설¹³¹⁾을 북한이 쉽게 노출되지 않은 지하에서 은밀히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라. 核武器 保有 展望과 威脅의 實體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원자력 산업은 전형적인 핵무기 개발 지향사업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은 앞에서 설명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과정(핵개발의 1단계)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폭장치 및 특수폭약 개발을 통하여 행하게 되는 고폭실험¹³²⁾(핵개발의 2단계)을 1983년부터 현재까지 약 70~80회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¹³³⁾ 그러나 영국의

130) 김민석,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p. 36.

131)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核擴散과 核擴散 禁止政策」, p. 87.

132) 내폭장치의 작동을 확인하고 고밀도, 고폭속, 고폭압을 확인하는 성능시험의 필요성에서 고폭실험을 하게된다.

133)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新東亞」(1990.12), p. 217.

한 전문가가 주장한 바와 같이 북한이 이미 실질적으로 4~5개의 핵폭탄을 개발완료하였다고 하는 북한의 既核開發說¹³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완성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때는 何時라도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핵보유문턱(Nuclear Threshold)에 도달해 있다는 설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美CIA국장 울시는 취임후 두번째로 28일 하원의무위원회 국제안보-국제조직-인권소위원회에 출석 1993년 2월 이후의 북한 핵개발과 관련한 진전상황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은 여전히 동아시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고 하는 25개가 넘는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세번 이상 추출해 1개 이상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갖고 있다는 미 행정부의 평가는 아직까지 유효하다.¹³⁵⁾

나아가 북한은 핵무장의 최종단계인 운반수단의 확보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으로써 핵위협을 더해주고 있다. 1980년대~90년대 현재 북한은 地對地 미사일(사거리 500Km)은 15기 정도,

134) 1993년 3월에 발표된 KGB에도 북한이 첫번째 원폭장치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6~7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미하원산하 공화당 연구위원회가 1993년 7월 14일 발표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서, 통일원 정보분석실, 「시사정보 93-11」, p. 2.

135) 「朝鮮日報」, 1993.7.30.

Frog 5/5/7는 54기 정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 전지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개량형 SCUD 地對地 미사일(사거리 500Km) 부대를 연대 규모에서 여단 규모로 증편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까지를 사정거리에 두는 로동 1호(사정거리 1000km)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¹³⁶⁾ 이들은 모두 약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서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핵미사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요격미사일(ABM)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핵미사일 공격은 폭격기에 의한 원폭의 공중투하를 증가하는 위협이 될 것이다.

3. 北韓 核政策의 特徵과 展望

가. 北韓 核政策의 特徵

북한 핵개발 動因에 관한 앞의 분석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은 핵개발 의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해 왔다. 국가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기술적 수준 또는 경제력 등의 ‘하드웨어’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그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비록

136) 일본에서 발행하는 「군사연구」지 1993년 8월호에 북한이 로동 1호에 이어 사정거리를 각각 1000km/1500km로 하는 로동 2/3호도 개발 중에 있다는 내용의 글이 발표되었다. 「世界日報」, 1993.7.28.

핵무기 개발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거의 없으나¹³⁷⁾ 그들의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의 필요성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력 증강의지 표명에서 핵옵션의 당위성을 간접적으로 투영시켜 왔다. 김일성은¹³⁸⁾ “우리는 지난 전쟁시기의 쓰라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전쟁시기 일시적으로 후퇴하게된 주요한 원인은 자체로 총을 많이 만들지 못한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겨우 기관단총과 박격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자 다른 나라에 무기를 요

137) 이기택 교수가 인용한 바에 의하면, 1965년 10월 북한 노동당 도당위원장과 군단장 집회에서 행한 연설 속에서 김일성은 “불원간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였는가 하면, 1967년 민족보위성 지휘관급 회의에서는 “우리도 원자무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호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박성철이 일본사회과학자 대표단에게 “우리는 1972년까지 원폭제조에 노력하겠다”는 핵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전해진다. 이기택,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서울: 삼영사, 1991), p. 289. 특히 김일성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라기 보다 미국의 핵위협을 두려워하여 군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虛張聲勢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들이 핵능력이 있거나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핵개발의 지표명 발언들은 오히려 그들의 핵개발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북한이 “원자력을 연구하는 것은 원자탄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핵개발 의지를 은폐하는 것이 보통이다.

138) 「김일성 저작집 2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p. 137~138.

구하였는데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실어오다 보니 일시적 후퇴가 끝난 다음에야 도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총이 없어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버지 주머니에 있는 돈도 제 주머니에 있는 돈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핵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무기”를 자체 생산하여야 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김일성이 지칭하고 있는 “여러가지 무기”는 核武器를 예외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정책과 관련하여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어떠한 방법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북한은 항상 핵무장 옵션을 견지하면서도 철저하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반핵 평화주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핵의 평화적 이용」 등의 주장을 통한 대내외적인 평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태도는 먼저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반핵운동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핵위협은 6·25전쟁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핵위협은 북한의 대남무력침략과 같은 무모한 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이를 크게 과장하면서 미국과 핵반입을 허용한 남한을 다같이 맹렬히 비난하였던 것이다.¹³⁹⁾ 특히 유엔 사령부가 280mm 핵포와 어네스트존 핵미사

일을 남한에 반입한 사실을 간파하고 북한은 수차례의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남한의 원자무기 기지화를 반대하고 남한과 미군이 군사 분계선에서 대규모 원자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한의 핵무기 기지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으나 1960년대까지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⁰⁾

북한의 이러한 반핵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韓半島 非核地帶化」 주장으로 구체화되었다.¹⁴¹⁾ 이때부터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기반으로 반핵운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그들의 반핵평화 이미지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1978년 일본 사회당과 「東北亞 非核·平和地帶」 창설에 합의하는가 하면,¹⁴²⁾ 1970년대 말까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비핵·평화지대 창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중국과 구소련은 물론이고 비

139)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원 및 전체 남조선사회계에 보내는 서한」에서 북한은 “이승만은 … 미국호전분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 경계에도 원자력 무기를 반입하기 위한 노골적인 책동을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승만은 누구를 학살할 목적으로 원자무기를 반입하려 하는가?”라고 남한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원 및 전체남조선사회계에 보내는 서한(1956.11.7),” 平和研究院 編, 「북한군사문제제의 자료집 1948-1988」 (서울: 平和研究院, 1989), p. 98.

140) 위의 책, p. 35.

141) 1976년 8월 12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문제 긴급 국제회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위의 책.

142) 「讀賣新聞」, 1978.12.21.

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호응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세를 기반으로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구체화된 反核運動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1981년 3월 평양에서의 북한과 일본 사회당과의 「東北亞 非核·平和地帶」 창설을 위한 공동노력 선언, 1982년 2월 일본 사회당에 韓半島 및 東北亞地域 非核·平和地帶 창설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대회」 개최 제의, 그리고 1986년 9월 친북한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한 80여개국 125개 단체 대표들을 초청한 「韓半島 非核·平和地帶를 위한 평양 國際會議」 개최¹⁴³⁾ 등은 북한의 반핵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실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영토, 영공,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응할 것이다.¹⁴⁴⁾

143) 「로동신문」, 1986.9.6~9.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이러한 비핵지대화 주장을 주로 정치선전적 차원에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비핵지대화 주장으로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구소련 및 중국 그리고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이용해 왔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은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韓半島 非核地帶化」로 그 범위를 좁혀 한반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이득을 유도해내고자 노력을 배가해 왔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서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를 실현시키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주한미군 보유 핵철수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에 분명하다.¹⁴⁵⁾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간에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이 발표됨으로써 불완전하게나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1년 9월 「부시 선언」과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非核5原則 宣言」, 12월의 「韓半島 核不在 宣言」 등 일련의 조치로 주한미군핵 철수가 기정사실화 되었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144) 「「한반도 비핵 평화지대 창설제의」와 관련한 북한정부의 성명, 1986.6.23,」 平和研究院, 「북한군사문제 제의자료집(1948-1988)」 (서울: 平和研究院, 1989), pp. 836~37.

145) 송영선, 「韓半島의 核,」 「新東亞」 (1991.6), p. 216.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 함을 규정하면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음으로써 북한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또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의혹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의 반핵운동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의 주장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같은 제의를 통해서 “세계평화위업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시위함으로써 세계적인 여론 형성에 의한 지위획득과 함께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군핵 철수와 같은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고 동시에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외부적인 의혹의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핵무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견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평화공세적 태도는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용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1974년 북한은 「원자력법」을 제정함으로써 평화적 핵개발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 하였으며¹⁴⁶⁾ 이어서 同年 3월 「전국 공업열성자

146) 「로동신문」, 1992.4.10.

대회」에서 김일성은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것을 독려했다.¹⁴⁷⁾ 또한 1976년 11월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들에게 한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원자력 연구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강조하고 나섰다.

원자력에 대한 연구사업도 잘하여야겠습니다. 지금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 과학자들 보다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 부문의 과학자들이 원자력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연구하는 것은 원자탄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면 우리 나라에도 연료가 고갈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원자력을 동력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원자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사업도 강화하고 학생들도 많이 키워야 하겠습니다.¹⁴⁸⁾

또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1980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진행)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에서 김일성은 “10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¹⁴⁹⁾한다고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거론하였으며

147) 「김일성 저작집 2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43.

148) 「김일성 저작집 3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6), p. 474.

149) 統一院,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4집」(서울: 統一院, 1988), p.

그후 이틀뒤 발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 결정서(1980년 10월 12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확정하였다.¹⁵⁰⁾

이와같이 국내적으로 북한은 핵기술의 발전이야말로 경제적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1974년 9월 6일 IAEA에 가입하고 동년 12월에 IAEA 극동지역 대표이사국으로 피선되기까지 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하였다. IAEA의 핵심기능은 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장려·원조함과 동시에 ② 저개발국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수혜국가로의 관련 물자·설비·시설을 제공하며 ③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제공한 핵물질 및 기술이 평화용이 아닌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관리를 설정하는 것이다.¹⁵¹⁾ 그러므로 북한은 IAEA에 가입함으로써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核平和主義(nuclear pacifism) 이미지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기술이양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IAEA를 통한 서방선진국의 기술획득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IAEA 가입후 약 10여년 동안 NPT조약을 체결(1985년 12월 체결)하지 않았으며 NPT조약 체결후 18개

49.

150) 위의 책, p. 115.

151) 남만권,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현황 및 사례분석」(서울: 韓國國防研究院, 1991), pp. 33~34.

월 이내에 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1992년 1월 체결)토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함이 없이 IAEA 회원국 지위를 누리면서 괄목할만한 핵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처리 및 고속증식로 개념의 도입 그리고 핵개발 의혹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제2원자로가 계획되고 가동되기 시작한 것과 1995년 쯤의 완공을 예상하고 있는 제3원자로의 건설이 시작된 것도 모두 북한의 IAEA가입 이후 1992년 1월 전면핵안전협정 체결 전까지 이루어진 핵기술 축적 결과에 해당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이러한 핵기술의 축적 결과 핵무기 보유문턱(nuclear threshold)에 도달한 국가가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북한의 핵정책은 2중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핵무장 해제의 요구와 핵무기 불취득 약속을 기초로 한 「핵평화주의」 그리고 핵무기 옵션의 不拋棄에 기초한 궁극적인 핵무장 국가 지위의 성취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인 핵정책은 한편으로, 북한의 장기적 차원의 외교정책적 목표(제3세계 모범국으로서의 평화지향적인 '작은' 사회주의 강국 이미지 구축) 달성과 주한미군핵 철수 유도 및 남한의 핵무장 억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당장 불요불급한 것으로 인식된 군사적 수단(핵무기) 확보라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핵평화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표방함으로써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잠정적으로 회피 또는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제3세계에 있어서의 국제적 지위를 최대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주지한 바와 같이 1992년 1월 북한이 체결한 핵안전조치 협정에 의거 핵사찰 수용후 북한의 핵시설이 핵무장과 직결되는 것으로 감지됨으로써 북한은 국제적 압력 특히 미국의 제재 위협에 직면해왔다.

나. 北韓 核政策의 展望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핵무장 직전상황 즉 핵 보유문턱에 도달한 기술과 시설을 갖춘 국가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앞에서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장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오히려 평화적 핵이용만을 강조하여 국제적 압력을 모면해 오고 있다. 실제로 1992년 4월 김일성은 워싱턴 타임스紙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고, 한두개의 핵무기로 수천개 수만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하기는 어렵다.”¹⁵²⁾고 주장함으로써 핵무기 개발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 소국(small state)의 핵개발 자체의 無用論까지도 밝히고 있다. 핵정책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이러한 공식적인 부정적 태도의 표명이 북한 스스로가 핵무장권을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것이다. 오히려 현재 북한의 핵

152) *The Washington Times*, April 15, 1992.

기술과 시설 측면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할 때 이러한 철저한 부정
 은 긍정과도 통한다는 다소 모순된 듯한 논리가 북한 핵정책 규명
 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이같은 철저한 부
 정 태도는 북한 핵무장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
 며, 북한은 결코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그들의 핵문제로 말미암아 대남관계 뿐만 아
 니라 IAEA, 유엔 그리고 개별국가로서의 주변 4강 특히 미국, 일
 본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증폭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킴으
 로써 북한의 대내적 어려움, 특히 경제적 곤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제기되지만 않았더라도 현재 北·
 美 관계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였을지 몰라도 최소한 일본과의 관
 계개선 또는 정상화만은 달성되었을 것이며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회생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의 국제적 고립에서도 크게 탈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북한이 아직까지 그들의 핵시설에 대한 투명성(영변의 핵
 의혹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제공할 기미 조차도 보이지 않음으
 로써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은 그들의 핵무장 선택권을 궁극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
 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現實政治(realpolitik) 측면에서 볼때
 북한은 핵무장 선택권의 포기없이 오히려 이를 수단으로하여 군사
 적·외교적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와 같은 판단을 전제할 경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정책으

로서 핵보유국지위 공개정책, 핵폭제조 자체만을 보유하여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책 그리고 핵폭 제조·보유후 그사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책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개할 경우 모호성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제재(군사·외교·경제적 제재)와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제까지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로부터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핵평화주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위신을 제고해온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장 공개는 국가의 권위에 보탬이 안됨은 물론 오히려 '무법국가(pariah state)'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이익은 현재 극도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처해 있는 북한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인도가 행한 것처럼 원폭실험후 핵국 지위를 공개하는 대신 이 실험 자체도 군사용 핵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 산업발전을 위한 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핵평화주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국제적 비난을 모면할 수도 있다.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핵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인도의 핵실험으로 핵국지위가 공개된 후 국제적인 제재행위가 뒤따랐지만 그것 역시 실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캐나다 정부의 핵협력 단절은 인도의 핵개발 계획을 마비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인도는 오일수입 비용, 내부적인 노동문제, 흉작 등으로 심각한 재정원조의

결핍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핵실험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예상되는 원조의 감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핵실험 이후에도 인도가 13개 국가로 구성된 원조 컨소시엄을 통해서 약 14억달러의 재정원조를 받게 된 것¹⁵³⁾은 핵국지위 확보를 기반으로 제고된 인도의 영향력을 일면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김정일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핵국지위를 공개·확보함으로써 외부적인 영향력 확대를 통하여 내부적인 체제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선포 시기가 김정일의 완전한 권력승계를 의미하는 주석직 이양 선포와 때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체제붕괴로 인해 전쟁도 불사할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경우 북한의 핵무장 공개는 외교적·군사전략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인도와는 달리 핵국지위를 공개하는데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고려할 수 있는 핵정책은 핵무장에 대한 모호성 정책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은 그들의 핵문제가 국제이슈화 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핵개발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은폐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NPT 가입, 전면핵안전협정 체결, 핵사찰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自意든 他意든 핵무장 모호성 정책의 실리를 챙기게 된 것으로

153) "Despite Bomb, Indian Gets Aid," *New York Times*, June 16, 1974.

보인다. 북한은 1985년 NPT조약 체결후 18개월 이내에 全面安全措置協定을 체결토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해오다가 1992년 1월에 가서야 同協定에 서명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된 최초보고서에 따라 관련 14개 사찰대상 시설을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에 걸쳐서 임시사찰을 받았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들의 핵무장 옵션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수락 자체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한국, 미국에 핵문제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왔다. 예컨대 북한이 전면핵안전 협정을 체결하여 핵사찰단계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핵사찰 시행상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핵무장 옵션에는 큰 지장이 없다. IAEA에 있어서는 피사찰국이 신고한 시설 또는 물질에 대해서만 사찰을 통한 100%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국은 核彈關聯 시설을 충분히 은닉할 수 있다. 피사찰국이 제공한 정보가 책임이행에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사찰은 사찰관련 당사국의 “협약”이 필수적이므로 특별사찰 요구 또한 정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 강제사찰은 사전신고된 시설 중 IAEA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임의로 선정하여 불시에 사찰하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피사찰국은 주권침해 등의 이유로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¹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랫동안 전면핵안전협정 체결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면서 핵문제를 남한과 미

154) 남만권,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현황 및 사례분석」, pp. 90~91.

국으로부터 군사전략적 이득을 취하는데 최대한 활용한 결과 미군 핵의 철수선언 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핵”을가미¹⁵⁵⁾도 썩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사전통보에 의한 임시사찰 수준을 허용함으로써¹⁵⁶⁾ 부분적으로 그들의 핵기술 및 수준을 알리는 동시에 북한의 핵력수준 단계의 모호성을 조장하여 핵문제를 대남한 및 대미 교섭력의 제고를 위하여 이용하였다. 특히 이미 행해진 임시사찰에서 밝혀진 북한의 재처리 기술 능력은 북한의 핵모호성 정책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이 시설이 “실험실 기능의 80%가 민간용 실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0년에 일부시설이 완공돼 실험용으로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다고 인정한¹⁵⁷⁾ 사실은 핵정책 측면에 있어서 의미를 더하는 사항이다. 이

155) 북한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의 핵연료 자립화를 위한 원자력 기술개발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성공한 반면 북한 자신은 기보유한 핵재처리 기술 및 시설을 평화용이라고 고집함으로써 그들의 핵무장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한국은 미국에 의하여 원자력 기술의 꽃이며 핵연료 자립화에 필수적인 핵재처리 시설에 대한 연구자체까지도 불허됨으로써 핵무장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기술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화의 길 또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 셈이다.

156) 1992년 1월 22일 캔터(Arnold Kanter) 미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을 대표로한 첫 미·북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中央日報」, 1992.6.19.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된 플루토늄 용도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⁸⁾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구비하게 된다면 핵무장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이 며칠 또는 몇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핵재처리 시설은 핵폭보유문제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¹⁵⁹⁾

북한의 핵의혹을 더하면서 핵모호성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시켜 준 또 하나는 영변 부근에 급조된 듯한 2개의 핵의혹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요구¹⁶⁰⁾에 직면하여 북한이 행한 NPT 탈퇴선언이다. 전술한 임시사찰 진행도중 북한의 최초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자발적 협력이 크게 결핍된 것이 노출됨으로써 북한의

157) 「東亞日報」, 1992.5.17.

158) 북한의 오창림 대사는 “북한은 핵연료주기연구를 위해서 ‘방사능 화학실험’을 건설중이며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는 중단될 수 없고 이시설은 완공되어야 한다. 또 과학연구가 목적인 이시설은 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간접적으로 그들의 핵개발 강행 의사와 연결될 수 있다. 「東亞日報」, 1992.6.19. 그런데 오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협상을 위한 허세(bluff)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핵재처리 기술확보 자체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핵모호성 정책 차원에서 그만큼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59) Alan Dowty, “Nuclear Proliferation: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 (March 1978), p. 107.

160) IAEA의 대북한 특별사찰결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성훈, 「北韓核問題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5~10 참조.

핵의혹이 여전히 문제의 소지로 남게 되었다. 특히 영변 부근에 급조된 2개의 의혹시설이 핵폐기물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일 가능성과 관련 IAEA사찰단의 의심이 증폭된 것이다. IAEA측은 제6차 임시사찰시(1993년 2월) 2개의 핵시설에 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북한은 IAEA의 특별사찰에 대한 최후통첩에 직면하여 NPT탈퇴를 통한 세계 NPT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강경책을 선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¹⁶¹⁾ 북한의 NPT 脫退宣言의 목적은 일단 1993년 3월 25일로 정해진 특별사찰에 대한 최후통첩을 회피함으로써 핵개발 확증요소 포착을 거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모호성 정책을 가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북한의 재처리 능력, 플루토늄 보유 유무 등 사실상의 핵무장 옵션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 옵션을 공식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공개하는 이상의 군사적,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이러한 모호성 정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利點을 유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러시아나 중국이 군사동맹을 통한 북한안보를 확실히 보장하기 보다는 동맹의 성격자체를 변화 또는 약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장 위협을 가시화 함으로써 이들 특히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對北韓 방위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북한

161) 「로동신문」, 1993.3.9.

은 핵폭제조 가능성에 근거한 핵무장 위협으로 대외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특히 미국의 대남한 군사지원(팀스피리트 훈련, 핵우산 체제, 주한미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염려하여 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큰 남한의 핵무장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핵협상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경협과 원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계개선 조차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利點은 북한이 核武裝選擇權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핵무장국 지위를 공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NPT탈퇴라는 強攻手段으로 수차례에 걸친 美·北 고위급 협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단계 4차 美·북한 고위급 회담에서는 쌍방간의 공동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북한은 同共同聲明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몇몇 중요한 요구들을 관철하게 되었다.¹⁶²⁾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
-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불사용 보장
- 핵안전 적용의 공정한 보장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의 안전 보장
- 상호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162) 「서울신문」, 1993.6.13.

- 쌍방 정부간 평등성의 기초 위에 대화 지속

上記의 공동성명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핵불사용 등의 북한의 기존 요구는 「核武器를 포함한 모든 威脅에 대한 保障決議」를 통해 잠정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며, 「韓半島 平和와 安全保障 支持 決議」는 남한의 T/S 훈련 중지, 그리고 향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관한 북한의 요구 관철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相互主權 尊重과 內政不干涉의 決議」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인정이라는 對美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미국의 대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核安全措施의 公정한 適用原則」은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IAEA의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여러 측면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피력해 왔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가능케한 것은 핵옵션의 효율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핵모호성 정책의 효율성은 對美關係에 있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남관계 및 대내적 측면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핵문제에 관한한 남한의 핵무장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구속력은 경제협력이라든가 국제공조체제 획득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제외하고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모호성 정책을 통해 미·북한 협상테이블에서 거의 강대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미국·한국·북한의 삼자관계에 있어서 향후 강력

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를 수단으로 적극적인 對美協商을 벌임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의 이완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남한의 안보 불안정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핵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협상 당사자로 남한을 제외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남한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⁶³⁾

대내적 차원에 있어서도 북한은 그들의 핵정책을 기민하게 구사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후 도래하게 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이러한 업적을 김정일의 정치적·군사적 지도력에 의한 당연한 결과로 부각·선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와 가능성들은 단지 북한이 그들의 핵모호성 정책을 면밀하게 수행함으로써 얻어졌거나 얻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 그들의 핵무장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주어진 위기상황을 핵모호성 정책을 통하여 궁극적인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 옵션의 결정적인 포기없이 다양한 형태의 핵모호성 정책 수행을 통하여 金父子 世襲體制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으로

163) 유진바자노프, 「북한핵카드」는 內治用, 「京郷新聞」, 1993.7.15.

124

판단된다

第 VI 章 結 論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北韓의 安保는 김일성 개인을 주체로 하며 노동당 일당지배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김일성 유일지배 정권을 객체로,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 내지는 저지를 추구하는 세력 또는 행위 등을 위협으로 하는 논리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논리 구조하에서 北韓의 군사정책 역시 김일성 정권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확대하기 위하여 對南赤化 統一戰略 및 내부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방어정책 차원에서 수립·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즉 北韓은 김일성 정권안보를 위하여 대남적 차원에 있어서 무력적화통일을 궁극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지배기회를 최대화하며, 대내적으로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기하고, 국제적 측면에 있어서 중국 및 구소련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미제국주의' 위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방위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지속하여 왔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극도로 악화되어온 전략환경 하에서도 이러한 공세적인 군사정책을 완화 또는 수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김일성의 정권안보를 위하여 이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어온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긴장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 뿐만 아니라 美國을 포함한 周邊 4強의 직·간접적 위협에 대처하면서 기존의 攻勢的 軍事力 增強政策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내부체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사상혁명을 강화한다든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¹⁶⁴⁾한다든가 하는 일련의 긴장조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강경자세를 시위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안보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북한이 침체되어가는 경제 여건상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실질적인 군사우위 정책에 입각한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金父子의 世襲政權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북한은 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외부로 부터의 협력을 도출해내고, 내부적으로도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재분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를 회복시켜 체제안정을 유발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급격하게 진행해 나갈 경우 체제의 안정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김일성 정권안보에 대한 위협을 자초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정권안보 측면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의 심화를 통한 정

164) 「로동신문」, 1993.3.9. 이로부터 15일 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였으나 최근 귀순장교에 의하면 그 분위기만은 아직까지 상존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유지를 피하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정권 불안정 요인을 차단하고, 군사적으로도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 중심의 군비증강정책만은 고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체 경제 능력의 저하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소모적인 재래식 무기 증강정책을 지양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기존에 개발해오던 核開發體系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北韓의 핵개발은 총체적인 軍事的 抑制 機能側面에 있어서나 상대적인 開發費用 側面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핵개발 정책은 경제력 저하로 난관에 봉착해있는 상황에서 정권안보에 필요한 지속적인 군비증강정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군사정책 대안임에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 의혹으로 인한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일종의 핵보호성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피하고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협력과 같은 관계개선책을 유인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그러나 그들의 완전한 핵무장옵션 포기와는 거리가 먼 양보를 하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은 것을 취해왔다. 북한은 NPT(全面核安全協定)에 서명하고 이에 의거 핵사찰(임시사찰)을 수용하는 댓가로 실질적인 군사안보적 이익(미국의 핵무기 철수 등)을 이미 확보한 바 있으며 북한이 양보한 것(임시사찰 수

용)은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옵션 유지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그들의 핵무장옵션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영변의 2개 핵의혹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요구에 직면하여 강행된 북한의 NPT 脫退宣言은 북한의 이러한 핵무장옵션 포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같은 強硬路線의 선택으로 美國의 對北韓 宥和的 態度를 유도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의 핵카드를 당분간은 국제적 압력을 자초하게 되어 정권안보를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政權安保를 담보해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단지 상대에게 그 존재 가능성만을 인식시키고도 상당한 이익을 유인해 낼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정권의 붕괴와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일종의 보장책으로 작용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인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국지위를 공개함으로써 핵강대국과 정면대결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러한 핵정책이 得보다 失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대신 북한은 최소한 이스라엘과 같이 공식적으로는 핵무장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그들의 핵무장 능력을 시

위하는 소위 핵의 NCND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은 향후 핵의 평화적 이용 주장을 최대한 활용(대미 원자력 기술협력 요구)하면서 그들의 완전한 핵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 예상되나 금후 對美協商을 위한 전략적 이유로 그들의 실질적인 핵무기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최근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에 대한 정보들을 근거로 북한이 더이상 공세적인 군사력 증강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과거와 같은 국가재원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장 포기등과 같은 군사적 유화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는 최소한 북한 김일성 정권의 안보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낙관적 평가는 현재의 김일성 정권이 폐쇄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독재정권이 아닌 민주적 합의에 기초한 합리적 정권이라면 政權利益(regime interest)보다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합리적 가정하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체제가 김일성정권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적 이익요소를 용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 정권을 당장 위기로 몰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는 핵개발 포기과 같은 군사적 유화태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최소한 정권안보 측면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판단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김일성 정권은 붕괴의 위험성을 수반한 군사적 유화태도를 선택하기 보다는 오히려 핵카드 게임과 같은 어렵고도 위험한 공

세적 군사정책을 견지함으로써 現狀維持(status quo) 즉 김일성 唯一支配政權 維持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1. 單行本

國土統一院. 「核武器와 弱小國의 外交의 地位-東北亞 國際秩序, 核武器, 그리고 韓國」. 서울: 國土統一院, 1977.

極東問題研究所 編. 「北韓全書」上卷.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74.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外交論」.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77.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김일성 저작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 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김일성 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남만권. 「국제원자력기구 核査察 現況 및 事例分析」. 서울: 韓國國防研究院, 1991.

國防部. 「國防白書」. 서울: 國防部, 1990.

———. 「國防白書」. 서울: 國防部, 1993.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안드레아스 크라체크 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사회」. 서울: 증원문화, 1990.

이선호. 「國家安保戰略論」. 서울: 정우당, 1990.

전성훈. 「北韓 核問題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鄭光河.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9.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統一院.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제4집」. 서울: 統一院, 1988.

———. 「分斷 45年 南北韓 經濟의 綜合的 比較研究」. 서울: 統一院, 1990.

———.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서울: 統一院, 1990.

平和研究院 편. 「북한군사문제 제의 자료집 1948-1988」. 서울: 平和研究院, 1989.

하영선. 「韓半島의 核武器와 世界秩序」. 서울: 나남, 1991.

황성모 외. 「北韓體制研究」.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Beaton, Leonard and Madox, John.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New York: Praeger, 1962.
- Berkowitz, Morton and Bocks, P. G.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A Reader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 Bull, Hedley. *The Control of the Arms Race*. New York: Praeger, 1961.
- Charvin, Robert and Marouani, Albert.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es Etats Socialistes*. Paris: PUF, 1981.
- Defarges, Phillippe Moreau. *Les Relations Internationales Dans le Monde d'Aujourd'hui-Conflit et interdependances*. Paris: Editions STH, 1987.
- Hayes, Peter.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1.
- Kaplan, Morton A.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2nd ed., New York: John Wiley Sons, 1967.
- Kim, Chang Ha. *The Immortal Juche Idea*. Pyongyang: Korean Workers' Party Press, 1987.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Meter, Stephen M.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70 without Arms Control*. Washington D. C.: NPA, 1958.

- Potter, William C. *Nuclear Power and Nonproliferation*. Cambridge: Oeleschlager, 1982.
- Quester, George. *The Politics of Nuclear Prolifer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Wentz, Walter B. *Nuclear Proliferation*. Washington D. C.: Public Affairs Press, 1968.

2. 論 文

- 김남식.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統一問題研究」, 제3권 1호 (1991 봄).
- 金民奭. “北韓의 核武器 開發現況.” 「北韓研究」, 제3권 22호 (1992 여름).
-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12.16).” 「김일성 저작집 2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5.27.
- 김철환. “북한의 과학 기술 수준.” 「新東亞」, (1990.12).
- 國防部. “1990년대 북한-소련 관계연구.” (1988.12).
- 레빈. “北韓의 對外軍事關係.” 이흥구·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對外適應. 서울: 法文社, 1986.
- 문정인. “탈냉전과 제 3세계 국가안보의 재조명-‘소프트 웨어’를 중심으로 한 접근.” 「현대사회」, (1992 봄·여름).
- “북한핵시설의 3대 수수께끼.” 「月刊朝鮮」, (1992.8).
- 사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기반-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박한식 편. 「北韓의 實相과 展望-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서울: 동화연구소, 1991.
-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 「로동신문」, 1963.10.28.
- 서재진. “主體思想과 民族主義의 關係.”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서진영. “북한의 경제개발과 국방비문제.” 이호재 편. 「韓半島 軍縮論」. 서울: 法文社, 1989.
- 송영선. “한반도의 핵.” 「新東亞」, (1991.6).
- 윌리엄 C. 포터 저, 김석용 역. 「핵확산과 핵확산 금지정책」.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3.
- 유영옥. “北韓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化展望.” 「統一問題研究」, 제4권 3호 (1992 가을).
- 유진바자노프. “「북한핵카드」는 內治用.” 「京鄉新聞」, 1993.7.15.
- 이규열. “북한의 군사비 및 군사력에 관한 분석.” 서진영 편. 「現代中國과 北韓 40年」.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1.
- 이기택. 「韓半島 統一과 國際政治」. 서울: 삼영사, 1991.
- 伊東孝之. “동구혁명과 비스탈린화.” 「격동의 동구현대사」. 서울:

좋은책, 1990.

이상민. “北韓의 政治構造와 權力世襲.” 대륙연구소. 「北韓研究」,
(1991 가을).

李善浩. 「新韓國國防論-新世界 秩序와 韓國國防의 當面課題」. 서
울: 정우당, 1993.

이중학. “북한의 군사정책과 전략.” 박재국 외. 「北韓軍事政策論」.
서울: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1983.

이호재. 「核의 世界와 韓國 核政策-國際政治에 있어서의 核의 役
割」. 서울: 法文社, 1987.

정규섭·강원식·문홍호. 「東北亞 新國際 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
一基盤 造成方案」.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정준호. 「국가유형별 안보론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
원, 1990.

정진위. 「北方3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며 일해가자.” 「조선중앙방송」, 1991.9.2.

차영구. “북한과 중·소간의 군사협력 -북한의 대 중·소 군사협
력을 중심으로.” 이홍구·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의
世界: 80년대의 對外適應」. 서울: 法文社, 1986.

최경락·정준호·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론-존립과 발전을 위
한 대전략」. 서울: 法文社, 1989.

한국은행. “1992년 북한 GNP추정결과.” (1993.6).

함택영. “남북한 군비경쟁 및 군사력 균형의 고찰.” 함택영·리영
희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

제연구소, 1992.

- “Despite Bomb, Indian Gets Aid.” *New York Times*. June 16, 1974.
- Dowty, Alan. “Nuclear Proliferation: The Israeli Cas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1 (March, 1978).
- Greenwood, Ted., Rathjensand, George E., Ruina, Jack. “Nuclear Power and Weapons Proliferation.” *Adelphi Paper*. No. 130,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6.
- Morgenthau, Hans J.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Berkowitz, Morton and Bocks, P. G. eds. *American National Security: A Reader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5.
- Spector, Leonard S. “Nuclear Ambitions,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1989-1990.” Boulder, San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 Solaz, Stephan.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Report of Study Mission to South Korea, Japa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July 12~21, 1980*.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 VanCleave, William R. “*Nuclear Proliferation: The Interaction of Politics and Technology*” (Ph. D. dissertation at Claremont Graduate School, 1967).
- Wolfers, Arnold. “National Security as an Ambiguous Symbol.” in Rosi, Eugene J. ed. *American and Detente*. New York: Dodd Mead,

1973.

3. 其他

「京鄉新聞」.

「內外通信」.

「東亞日報」.

「로동신문」.

「민주조선」.

「서울신문」.

「世界日報」.

「시사저널」.

「朝鮮日報」.

「中央日報」.

「讀賣新聞」.

Newsweek.

The Washington Times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と 南北韓 關係 : 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研究報告書 93-1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0월 일

發行日 1993년 10월 일
